



통합진보당 청년비례 경선

**99%의 목소리
김지윤 후보의 도전**

▶ 8 ~ 9 면

3.8 여성의 날

**투쟁 속에서
성장하는 여성 투사들**

▶ 4 ~ 5 면

후쿠시마 핵 재앙 1년

**핵 없는
세상을 향하여**

▶ 11 면

KTX 민영화

**민영화를 막아낼
힘은 무엇인가**

▶ 6 면

발행인_최성호 편집인_최성호
인쇄인_(주)이피디 이송철
등록번호_서울다08179 (격주간)
등록연월일_2009년 1월 12일
주소_서울시 중구 회현동2가 57-1 2층
전화_02-777-2792 팩스_02-777-0211
이메일_02-777-2791 E-mail_left21@left21.com

ISSN 2005-8217



Left21.com

제76호 | 2012년 3월 3일 ~ 3월 16일 | 값 1,800원

레프트21

‘1%의 혀’ 김재철에 맞선

MBC 파업에 승리를!

MB 정권의 나팔수가 되길 거부한 언론 노동자들의 파업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MBC 노동자들은 한 달 가까이 파업을 벌여 보도본부장을 끌어내렸다.

간판 앵커들이 마이크를 내려놓고, 부·국장들까지 직책을 버리고 파업 대열에 합류하는 등 열기를 더해 가고 있다. 지방MBC 노동자들도 파업 동참 준비를 시작했다.

KBS·YTN 노조도 3월 6일과 9일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KBS 새노조 김현석 위원장은 “이번 파업은 열화와 같은 조합원들의 목소리에 노조가 끌려간 것”이라며 최근 노조 가입 문의도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이로써 사상 초유의 방송 3사 공동 파업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 노조들은 별도의 인터넷 방송을 위한 총선 공동 기획단을 구성하며 ‘총선 보도를 명분으로 쉽게 복귀하지 않겠다’는 뜻도 밝혔다.

〈부산일보〉, 〈국민일보〉, 〈연합뉴스〉 노동자들도 파업과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레임덕이라는 “유리한 조건”에서 언론 노동자들의 반격이 시작된 것이다.

이 투쟁은 지금 1퍼센트 정권에 맞선 저항의 초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래서 야당들은 물론이고, 새누리당의 정두언·남경필조차 “낙하산 사장이 문제”라며 MBC 파업 노동자들을 편들었다.

MBC와 〈부산일보〉의 지분(각각 30과 1백 퍼센트)을 소유한 박근혜는 언론 파업 얘기만 나오면 “분위기 안 좋아진다”고 고개를 돌리고 있다.

정부와 지배자들은 여기서 밀리면 언론 통제가 어려워지고 더 넓은 층의 저항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할 것이다.

그래서 낙하산 사장들은 쉽게 물러나지 않고 반격을 시작했다. MBC 사장 김재철은 제작 거부를 주도한 박성호 기자회견 회장을 해고했고, 추가 징계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사측은 신문 광고를 내 “불법” 운운하며 파업을 비난했고, 대체인력 투입과 비상체제 운영을 선언했다.

그러나 노조는 박성호 회장 해고에 즉시 반발해 “당신들의 칼부림은 우리를 더 강하게 할 뿐”이라며 파업 미참가자들에게 “이제 결단해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 아직 파업에 동참하지 않은 드라마국에서도 PD 51명 중 50명이 성명을 내 파업 지지를 선언했다.

▶ 6면으로 이어짐

한미FTA 발효 말고 폐기하라

>> 관련기사 7면



레프트21을
정기구독 하십시오



정기 구독료(우편료 포함) : 1년 (26개 호) 5만 원
2년 (52개 호) 10만 원

● 신청 : 02-777-2792, 웹사이트(www.left21.com)에서도 정기구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와 기업의 후원을 일절 받지 않고, 독자·지지자들의 후원으로 운영하는 신문을 **후원해 주세요**

후원회원 가입하기 문의 02-777-2792 / left21@left21.com
웹사이트에서 신용카드 결제, 핸드폰 결제, ARS결제도 할 수 있습니다.

후원 및 정기구독 입금 계좌 (예금주 (주)레프트미디어) : 국민은행 020601-04-080896 / 우리은행 1005-301-422382 / 신한은행 140-008-401399 / 농협 301-0010-1643-71 / 하나은행 296-910007-15804

누구의 말을 믿을까요?

“소득양극화가 현 정부 들어서 개선됐다. ... [그러나] 청년실업은 전 세계적 현상”

이명박, 매를 부르는 화법

“내 주위에 비리를 저지른 사람 생길 때마다 정말 가슴이 짝 막힌다. 화가 날 때도 있다. 가슴을 칠 때가 있다. 제 심정이 이런데, 국민들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할 말이 없다.”

몸통 이명박

“청문회 통과하는 사람 구하기 쉽지 않았다.”

이명박, 이해는 간다

“어디 저 컴컴한데 그런 데서 하라, 그런 거는 ...”

FTA 추진 주범 김종훈, 강북 출마는 싫다며

“새누리당은 도덕성을 가장 높이 본다.”

나경원, 피부가 아니라?

“[나경원] 의원님이 요번 총선에 나 오신다고 얼마 전에 오셔서 조금 손 보고 가셨다.”

강남 A 피부클리닉 원장

“가슴 아프다. 그러나 그는 강한 사람이니 제 역할을 더 크게 하리라고 본다.”

강용석의 사퇴를 안타까워하는 전여욱, 이제 바로 유류상충

“요즘 그 신문 보는 사람이 제 주변엔 거의 없다.”

여성 우주인 이소연 씨, 자신의 새누리당 출마설을 오보한 <조선일보>에 대해

“김진표가 진보면 전 국민이 체계바라!”

한 네티즌, 자신이 ‘과격 진보’라는 김진표의 말에

“여보, 당신은 지금 울고 있겠지. 용서해 주세요.”

주성영, 성매매 의혹으로 불출마 선언을 하며.

“‘명박산성’에 이어서 ‘명숙산성’이냐”

민주당사 앞에서 공천 쇠신 요구 농성하다 경찰차에 가로막힌 시민들

아프가니스탄

제국주의가 불태운 것은 코란만이 아니다

지난주 아프가니스탄에서 가장 큰 미 군기지가 있는 바그람의 한 조각로에서 코란 등이 발견된 뒤 시위들이 폭발했다. 시위대가 경찰차를 불태우고 바그람 공군 기지와 다른 상징적인 외국군 점령지들에 몰려들면서 시위대들이 살해됐다.

버락 오바마는 이 사건에 대해 사과하고 진상조사를 약속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 시위가 미국 주도 점령의 앞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두고 심각한 우려가 존재한다. 지난주에 아프가니스탄 의원 20명 이상이 외국 군대 철수를 주장했다. 아프가니스탄 대통령 하미드 카르자이는 미국의 전략에 대해 공공연하게 비판하고 있다.

‘테러와의 전쟁’의 여명 속에 시작된 아프가니스탄 침략은 아프가니스탄 민중과 제국주의 모두에게 재앙이 됐다. 2001년 9월 테러리스트들의 뉴욕 공격 이후 조지 부시 대통령은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이 범인인 알 카에다에게 은신처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이전에는 미국의 동맹이었던 탈레반은 이렇게 미국의 적이 됐다.

서방이 가장 크게 우려하는 것은 특히 탈레반이 통제하지 못하고 있는 지역에서 점령에 반대하는 세력들에 대한 지지가 늘어나 대중적 분노가 표출되는 것이다. 점령은 아프가니스탄을 파괴했다. 삶을 개선시키겠다는 약속과는 반대로 많은 아프가니스탄인들의 삶이 더욱 악화됐다. 특히 전쟁이 시작될 때 ‘여성들을 위한 전쟁’이라고 했지만 아프가니스탄 여성의 삶은 악화됐다.

단지 아프가니스탄 여성의 12퍼센트만이 읽고 쓸 수 있다. 산모와 영아 사망률은 계속 높은 상황에서 국내 난민이 증가하고 있고 많은 여성들이 빈민가에서 의료 지원도 받지 못한 채 더러운 하수가 흐르는 곳에서 출산을 한다.

피난

이번 겨울에 끔찍한 상황이 더욱 악화됐다. 국제엠네스티는 매일 4백 명이 넘는 사람들이 전투와 빈곤을 피해 국내 난민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탈레반을 몰리쳐 아프가니스탄 민중이 스스로 자신의 앞날을 결정하도록 하는 좋은 전쟁이라고 선전됐다. 하지만 진실은 서방 제국주



인도네시아의 난민

이번 겨울에 기록적인 수의 난민(대부분 아이와 노인)이 추위 때문에 사망했다. 카불에 있는 국내 난민만 3만 명이 넘는다.

의가 아프가니스탄과 이 지역의 미래를 결정하려고 한 것이다.

서방세력은 민주주의 대신 부패한 꼭두각시 카르자이를 이식했다. 카르자이와 그를 비판하는 군벌들 모두 아프가니스탄에서 돈을 긁어모아 제 호주머니를 채우고 있다. 미국과 영국은 이 부패를 지휘하고 제도화하고 있다.

전쟁은 아프가니스탄의 모든 지배계급들 사이에 커다란 분열을 불러일으켰다. 국내적으로 인기 없는 전쟁은 외국에게는 승리할 수 없는 전쟁을 의미했다. 민간인과 군인 사망자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아프가니스탄은 석유 한 방울 나지 않

는 가난한 지역이고 국가수입의 78퍼센트를 변변치 않은 농업 산출이 차지한다. 하지만 아프가니스탄은 수백 년 동안 다양한 제국주의 패권들에 맞서 투쟁해 왔다. 제국주의는 단지 석유와 같은 자원을 통제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것은 강대국이 경제적·정치적 영향력을 획득하기 위해 투쟁하는 것을 의미한다. 부시와 오바마는 전략적 요충지에 자리잡은 아프가니스탄에 서방의 의지를 관철하려고 했다.

제국주의는 지난 1백50년 동안 세계를 좌우하는 주요한 힘이었다. 제국주의를 작동시키는 것은 강대국 사이의 경쟁이다. 경쟁이 끊임없이 원료와 이윤을 축적하려

유류세도 기름값도 내려라

지난해 말부터 계속된 미국의 이란 압박 강화로 기름값이 급등하면서 노동자들의 삶은 더욱 팍팍해지고 있다.

휘발유 가격은 50일째 올라 2월 27일에 사상 처음 리터당 전국 평균 가격이 2천 원을 넘었다. 서울에서는 리터당 2천2백 원이 넘는 경우가 흔하다. 이것은 물가인상을 더 부추길 계 켜한다.

상황이 이런데도 이명박은 유류세 인하나 정유사들에게 가격 인하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일시적으로 얼마

깎으라고 하는 건 무리한 정책”이라는 것이다.

부자 감세에는 적극 나섰던 이명박 정부가 평범한 사람들이 주로 부담하는 유류세 같은 간접세를 낮추는 것에는 끝까지 반대하는 것이다.

게다가 SK·GS·S-Oil 같은 주요 정유사들은 지난해 2분기에 일시적으로 기름값을 고작 1백 원 내리면서 앓는 소리를 했지만, 결국 1조~3조 원이 넘는 엄청난 순이익을 거뒀고 그중 수천억 원씩

고 하는 자본주의 작동 원리의 핵심이다.

이미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리비아 그리고 전 지구적으로 군대들이 주둔하고 있지만 서방 패권국가들은 계속해서 다른 나라들에도 개입하려고 한다. 지금은 시리아와 이란이 그 대상이다.

그러나 최근 역사는 반제국주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전 세계에서 전쟁과 제국주의의 그림자를 거둬들이려면 그 중심에 있는 위기와 경쟁의 체제를 파괴해야 한다.

시안 루덕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292호 / 번역 최용찬

을 배당했다.

유류세를 인하하고 정유사들의 ‘팔을 확실히 비틀어야만’ 기름값을 내릴 수 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기름값을 낮게 유지하려면 정유회사 같은 기간산업을 국유화하고 재벌의 탐욕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위해 운영해야 한다.

또한 미국의 제국주의적 이란 압박을 반대해야만 기름값 폭등도 막고 평화도 지킬 수 있다.

강동훈

처벌 강화가 아니라 교사 수만 늘려도 학교 폭력 줄어든다

2월 말 대구지법은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의 가해 학생 두 명에게 징역 3년, 3년 6개월 중형을 선고했다. 사법부는 판결문에서 약한 친구를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괴롭게 피해자의 일상을 파괴했기 때문에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15세 중학생에게 실형을 준 것은 매우 경악스러웠다.

교사들도 학교 폭력을 방조했다는 이유로 무더기 형사 기소를 당하고 있다. 이제 교사를 그만두고 싶다는 분위기가 교무실에 팽배하다.

물론 가해 학생들의 행동을 두둔하거나, 제재가 필요하지 않다고 보는 것은 아니다. 나는 학생들에게 폭력을 진단하고 해석하는 것은 완전히 ‘피해자 중심’이 돼야 한다고 가르친다. 공동체를 파괴하는 말과 행동은 적극적으로 제재한다.

하지만 이번 판결을 단순히 학교 폭력에 대한 처벌로만 볼 수 있을까?

MB 정부의 정치적 위기 해소용으로, 이 사회의 가장 약한 집단인 청소년과 교육 주체들을 마녀사냥하는 것이다. “학교 폭력을 조장한다”며 몇몇 웹툰(인터넷에 게재되는 만화)을 청소년유해매체

로 지정하고 마녀사냥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반면, 매우 대조적으로 지난해 지적장애 중학생을 한 달간 집단 성폭행한 고등학생 16명에 대해서는 용서가 필요하며 보호 감할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가해학생을 형사 처벌하는 것으로 학교 폭력이 줄어든 수 있다는 것도 착각이다. 감옥에서 더 큰 분노와 범죄를 배워서 나온다는 것은 사회적 통념이다. 그런 곳에서 15세 청소년이 교화되고, 자신의 잘못을 책임 있게 반성하는 법을 배울 것이라고 기대하기 힘들다.

학생들은 폭력을 과연 누구에게 배웠을까?

이 사회는 사람 죽이는 전쟁을 국익으로 정당화하고, 기업 이익을 위해 노동자들을 정리해고라는 죽음으로 내몬다.

학교의 환경은 또 어떠한가. 입시 경쟁 이외에는 아무것도 허용되지 않고, 화장실조차 부족해 자리를 차지하고 ‘큰일’이라도 봤다간 왕따가 될 지경이라고 아이들을 말한다. 이런 환경 속에서 학생들은 천사처럼 자라나기를, 교사들은 어떤 역경도 다 이겨내고 인성과 입시 실적을 고루

갖춘 아이들을 길러내기를 강요받는다.

학교 폭력을 줄이고 싶다면 대안은 오히려 간단하다. 교사 수를 지금 당장 두 배로 증원하라. 학교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해 안정적인 교육활동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라. 입시를 폐지하고 아이들의 발달 과정에 맞는 교육과정을 구성할 권한을 교사에게 부여하라. 이런 대안은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고, 폭력을 없앨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또, 학교 폭력 피해 학생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국가가 무상으로 지원하고, 가해 학생에 대해서는 상담과 치료프로그램으로 교육적 지도가 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청소년 상담지원센터는 턱없이 부족해, 가해학생 지도를 신청해도 수개월을 기다려야 할 지경이다.

진보적인 교사들은 폭력 이력을 생활기록부에 기록해 입시와 취업에 불이익을 주는 것에 불복종해야 한다. 이러한 저항이 더 효과적이려면 교사들이 실천할 수 있는 현장지침을 전교조 차원에서 마련해야 한다.

김연오 전교조 대의원

활동가들의 투쟁 달력



3월 1일(목) 오후 2시
한미FTA폐기 및 발효 중단 농성 돌입 기자회견

3월 3일(토) 오후 5시, 장소: 청계광장
한미FTA폐기 및 발효 중단 촛불 집회
주최: 한미FTA저지 범국민

3월 10일(토) 오후 3시, 장소: 서울시청광장
후쿠시마 원전 사고 1년, 이제는 탈핵이다
주최: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3월 10일(토) 오후 7시, 장소: 서울시청광장
쌍용차 희망텐트 콘서트(가칭)

3월 17일(토)
사회공공성 강화 및 민영화 저지 집회
주최: 공공운수연맹

서울 거리에서 레프트21을 만나 보십시오

격주 금요일 저녁 7~8시(다음호는 3월 16일)

강남역 11번 출구 글라스타워 앞
신촌역 3번 출구 맥도날드 앞
홍대입구역 8번 출구
혜화역 4번 출구
건대입구역 5번 출구 건대편스토랑대백화점 앞

서점에서도 레프트21을 살 수 있습니다

그날이 오면(서울대앞), 인사점(건국대앞), 풀무집(성균관대앞), 이음책방(대호로), 숨어있는 책(신촌), 아상한 나라의 헌책방(역촌), 동방서림(울산 현대차공장 앞)

《레프트21》 온라인

《레프트21》 트위터를 팔로우해 주세요. @left21twit

《레프트21》 페이스북의 팬이 돼 주세요. bit.ly/left21fan

새로운 온라인 기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www.left21.com



우파의 역겨운 반격을 분쇄하라

해체 위기 직전까지 갔던 이명박 정부와 집권당이 총선을 앞두고 기자회견과 역겨운 반격을 시도하고 있다. 쇠신 사기극에 매달려 온 박근혜가 2월 13일 “한미FTA에 반대하는 세력에 나라를 맡길 수 없다”며 먼저 신평탄을 쏘아 올렸다. 그러자 조중동부터 ‘이번 총선에서 여야는 한미FTA 폐기나 유지나 정면 승부하라’며 바람잡이에 나섰다, 이명박 정부도 곧 ‘3월 15일 한미FTA 발효’를 발표했다.

이어서 기획재정부는 ‘여야가 내놓은 복지 공약을 이행하려면 앞으로 5년간 3백40조 원이 들어갈 것’이라며 복지당국론을 다시 들고 나왔다. 우파 반격의 한 고비는 2월 25일 이명박의 취임 4주년 기자회견이었다. 원래는 이 자리에서 레임덕과 비리 의혹의 수렁에 빠진 이명박이 고개를 들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돼 왔다.

그러나 일말의 염치도 없는 이명박은 정면돌파를 선택했다. 이 자리에서 이명박은 온갖 비리 의혹에 대해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고, “복지는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해야 한다”며 대중의 복지 확대 열망에 어깃장을 놓았다. 그리고 한미FTA 발효,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 핵발전 확대 등을 계속하겠다고 선언했다.

그 후에도 우파의 반격 시도는 이어지고 있다. 검찰은 그토록 요란하던 돈봉투 사건을 고작 3백만 원짜리 돈봉투 하나만 밝히고 덮어 버렸다! KTX 민영화도 계속 추진되고 있다. 법원은 23일 왕재산 사건 피의자들에게 중형을 선고했고, 검찰은 민주통합당(이하 민주당) 지지층을 겨냥해 노무현 비자금 수사 재개를 선언했다. 위선적인 탈북민 방어 캠페인도 시작했다. 이런 우파 결집 시도가 이어지면서 한나라당의 지지율이 다시 민주당 합당을 앞서기 시작했다.

이것은 첫째, 이명박 정부와 우파들은 숨통이 끊어지기 전까진 개악과 반동 시도를 중단하지 않을 자들이라는 것을 보여 준다. 1퍼센트의, 1퍼센트를 위한, 1퍼센트에 의한 정치세력이라는 본질 때문



1퍼센트의, 1퍼센트를 위한, 1퍼센트에 의한 세력의 본질은 바뀔 수 없다.

에 이들은 아무리 99퍼센트의 비판을 받아도 개악 추진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이명박근혜’는 한미FTA와 제주도 미군기지 등에 일관되게 반대할 수 없는 민주당의 약점을 파고들며 정권심판론을 획석시키고 우파 결집을 시도하고 있다.

둘째, 민주당이 이들 우파 세력의 기사 회생에 일등공신 노릇을 했다. 대중은 민주당을 이용해서라도 이명박을 심판하고 싶어 했지만, 민주당은 오히려 위기에 처한 이명박에게 구원의 동아줄을 던져줬다.

우파 결집

이명박의 공격에 ‘좋은 FTA’ 운운하며 허둥대고 횡설수설하던 민주당은 공천에서도 한심한 본색만 드러냈다. 비리 혐의자, 검찰·한나라당·자유선진당 출신 철새 등을 잔뜩 공천한 것이다. 아버지 지역구를 상속받은 아들도 있다. 대표적인 새누리당 ‘X맨’ 김진표도 공천될 가능성

이 크다. 당내 경선단을 불법 모집하던 사람이 투신자살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그래서 민주당에 우호적이었던 <한겨레>마저 “정체성과 도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한명숙 지도부를 비판하는 상황이다. 이래서 민주당 지지율이 다시 추락하고 새누리당이 오히려 반사이익을 얻는 역전이 벌어진 것이다.

심지어 일부 네티즌들은 주요 사안마다 새누리당과 타협하는 민주당을 두고 ‘민누리통합당’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 비아냥거리고 있다. 김진표가 민주당의 구멍이라면 민주당이야말로 반이명박 진영의 구멍이었던 것이다.

셋째, 그럼에도 우파의 위기는 해결된 것이 아니다. 여론조사에서 여전히 ‘올해 총선은 정부 여당 심판 선거’라는 응답과 ‘새누리당은 도로 한나라당’이라는 응답이 높다. 이것은 박근혜 ‘쇄신’ 사기극이 산토끼(중도층)를 데려온 것이 아니라 흠어지던 집토끼(보수층)를 가까스로 다잡

은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이런 우파 결집 시도는 급진화하는 2030세대의 반우파 정서를 더욱 강화하는 효과를 낼 것이고, 우파의 분열도 막기 힘들다. 당장 이재오 공천을 둘러싸고 새누리당 공천위와 비대위 간에 갈등이 불거졌고 비대위 해체 위기가 나타났다. 양파 껍질 같은 이상득 비리 의혹도 하나 더 밝혀졌다. 정수장학회는 이미 ‘박근혜의 BBK’가 돼 버렸다.

투쟁의 봄을 앞당겨야 한다

민주통합당의 한계와 약점을 이용해 우파가 다시 득세하려는 상황에서 진보 진영의 대처가 중요하다. 지난해 말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안철수 바람 등에서 나타난 것은 노동계급 청년세대를 중심으로 한 반한나라·비민주당 정서였다. 한미FTA 반대 투쟁이 한창일 때도 거리의 여당은 민주노동당, 즉 지금의 통합진보당이었다.

진보진영이 단결과 투쟁을 중심에 두면서 민주당과도 차별되는 대안을 제시하려 노력했다면 이런 기회는 더 넓어졌을 것이다. 그러나 진보진영이 민주당을 추수하고, 민주당은 한나라당과 야합해

양당 구도 복원에 치중하면서 기회의 창은 작아져 버렸다. 따라서 진보정당과 진보진영은 더는 선거심판론과 ‘묻지마 야권연대’에만 기대서는 안 된다.

기회는 여전하다. ‘좌클릭’ 바람과 현대차 불법파견 판결 등이 보여 주듯이 여전히 우파는 이데올로기적·정치적으로 열세다. 당장 MBC 노동자들의 파업도 KBS·YTN 파업으로 번질 양상을 보이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도 곳곳에서 시작되고 있다.

진보진영은 이런 투쟁이 진보진영 전체의 투쟁으로 발전하도록 투쟁을 연결하고 일반화하는 구실을 해야 한다. 선거를 둘러싸고 대립·분열하기보다 이런 투쟁 속에서 단결해야 한다. 이런 투쟁이 승리하고 전진할 때 선거에서도 진보정당과 후보들의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

물론 다가오는 총선에서 이명박을 심판하려면 ‘야권연대’, 즉 민주당과 선거연합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외면할 수는 없다. 진보적 대중이 지지할 만한 민주당 후보가 나와서 진보정당 후보와 힘을 합치면 새누리당을 꺾을 수 있다는 것이 분명할 때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사회주의자들은 투쟁보다는 부차적인 영역인 선거에서 하나의 전술로서 야권연대를 지지할 수 있다. 물론 그 경우에도 투쟁을 희생·종속시키거나 민주당 비판을 삼가서는 안 될 것이다. (투쟁을 종속시키고 비판을 삼가하며 민주당과 권력을 공유하겠다는 것은 인민전선 전략이며, 사회주의자가 지지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야권연대는 불가피한 경우에 진보적 대중과 소통하며 운동을 건설하기 위해 채택하는 전술이지, 반드시 해야 하는 미덕이 아니다. 예컨대 김진표 같은 민주당 후보하고는 야권연대를 할 이유가 없다.

이번 민주당 공천자 명단을 보면 이런 자들이 상당수인데 이런 자들과 야권연대하는 것은 불가피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 이런 곳에서는 진보정당 후보가 끝까지 투쟁의 대의를 주장하고 진보의 싸움을 뿌리는 게 옳은 전술이다.

무엇보다 진보진영은 이명박 정부 아래서 빼앗겼던 것을 되찾으려는 투쟁의 봄을 불러오는 데 누구보다 앞장서야 한다.

전지윤·김문성

총선 공약 발표

‘좌클릭’ 홍수를 이용해 투쟁 건설하기

19대 총선을 앞두고 주요 정당들이 총선 공약을 쏟아 내고 있다. 이 공약들의 달라진 특징은 복지, 노동과 같은 진보 의제들을 내세우는 ‘좌클릭’이다.

그러나 이러한 ‘좌클릭’에서 옥석을 가려야 한다.

복지를 하려면 돈이 필요하고, 누구에게 돈을 건어 누구에게 복지를 제공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명박의 부자 감세를 되돌리고, 부자 증세를 통해 보편적 복지를 해야 한다. 또 실천 의지가 분명해야 한다.

새누리당 박근혜는 ‘맞춤형 복지’를 말하지만 부자 증세는 흉내에 그친다. 지난해 단독으로 통과시킨 증세도 적용대상이 최상위 0.2퍼센트에도 못 미치는 면피용 증세였다. 복지 재원 마련도 비과세 감면 정비를 고작 2조~5조 원을 마련하겠다는 게 거의 전부다.

민주통합당도 복지 재원 33조 원을 확보하겠다고 발표했는데, 부자와 기업이 추가로 져야 할 부담은 대략 8조 원 정도다. 반면 노동자들이 부담할 건강보험료 납입자 부담 확대 등을 통해 6조 4천억 원을 마련한다는 것도 포함돼 있다.

통합진보당은 “부자에게 세금을! 서민에게 복지를! 청년에게 일자리를!” 구호를 다시 내놔다. 부자·재벌 증세로 매년 39조 원을 확보하고, 지하경제 단속 등 탈세를 근절해 60조 원 규모의 복지 재정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계획이 더 과감하고 더 촘촘하다. 다만, “중하위층도 소폭이라도 증세에 참여하는 참여 증세 실현” 항목을 넣은 것은 우려스럽다. 노동자들은 이미 OECD 평균 수준의 복지 자원 부담을 하고 있다.

무릎 꿇고

이처럼 재원 마련 계획 자체가 복지 공약의 실현 의지를 보여 준다. 통합진보당이야말로 기성 정당과 달리 진정성 있게 복지 공약을 내놓은 것이다. 이는 노동 공약에서도 마찬가지다.

일단 이명박 정부 내내 노동 탄압을 일삼은 새누리당이 비정규직 보호 공약을 내놓고 ‘노동자의 친구’인 척하는 것은 역겨운 일이다. 새누리당은 지금이라도 쌍용차 노동자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는 것이 우선이다.

민주통합당은 2017년까지 비정규직 비율 20퍼센트대로 감축, 연평균 근로시

간 2천 시간 이하로 단축, 사용사유제한 조항 신설과 사용 횟수 제한, 파견법 개정 등을 발표했다.

통합진보당의 공약인 비정규직 25퍼센트로 감축, 기간제 사용 사유제한, 노동시간 연간 1천8백 시간으로 단축 등과 비슷하다. 통합진보당의 주축을 이루는 세력은 이런 요구를 건 노동자 투쟁에 함께해 왔다.

반면 민주통합당은 자신들이 집권했을 때 저지른 반노동 정책을 반성한 적이 없다. ‘재벌세’ 용어도 금세 꼬리 내리는 이들에게서 기업주·부자들의 반발을 헤쳐 나갈 공약 실현 의지를 찾기 힘들다.

경영계는 새누리당 공약조차 “비현실적”이고 “현실과 시장경제질서의 원칙에도 맞지 않”다며 길길이 날뛰었다.

따라서 공약이 실제로 실현되려면 기업주와 부자들의 반발을 잠재울 힘을 키우고 고

무해야 한다. 그 힘은 노동자들의 아래로부터의 집단적인 행동이다. 요즘처럼 ‘복지’와 ‘노동 존중’이 하나의 트렌드가 되고 있는 상황은 노동자들이 행동에 나서기 좋은 조건이다.

김재현



104주년 세계 여성의 날

투쟁 속에서 성장해 온 여성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은 투쟁하는 여성 노동자의 날이다.

1백4년 전 3월 8일, 미국 여성 노동자들은 ‘빵과 장미’, 즉 임금 인상과 노동조합 결성권, 투표권을 요구하며 시위와 파업을 벌였다. 이것은 전 세계 투쟁하는 이들에게 큰 영감을 줬고, 이날은 독일의 여성 사회주의자 클라라 체트킨의 제안으로 여성 노동자들의 투쟁을 조직하는 날로 기념되기 시작했다.

그 후 1백여 년 동안 여성의 노동자화는 꾸준히 진행돼 왔다. 한국에서도 현재 여성 취업자 중 임금노동자 비율은 75퍼센트(7백47만 명)에 이른다. 이 과정에서 여성들은 더 많은 교육의 기회를 누리게 됐고, 의식과 조직이 성장했고, 사회의 더 많은 부분에 진출하고 있다.

비록 출산 연령기에 여성들이 일을 그만 뒀다가 출산 후 다시 취업하는 경향이 여전히 남아 있지만, 오늘날 여성 노동자의 대다수는 결혼 후에도 일한다. 가족의 생계에서 여성의 수입이 더 중요해진 것이다. 배우자가 있는 가구 중 맞벌이가 차지하는 비중은 43.6퍼센트다.

또, 여성 노동자는 핵심 산업과 서비스업에서 일하고 있다. 여성 노동자는 보건·사회복지 관련직의 70퍼센트, 교육 관련직의 70퍼센트, 경영·회계 관련 사무직의 44퍼센트를 차지한다.

변함없는

하지만 1백여 년 전과 변함없이 여성 차별은 뚜렷하다. 지난해 1백만 원도 안 되는 쥐꼬리 임금과 따뜻한 밥 한 끼 먹을 수 없는 열악한 노동조건에 항의해 점거파업을 벌였던 대학 청소 노동자들의 투쟁은 여성 차별의 현주소를 보여 줬다.

1975년 여성 노동자의 평균임금은 남성의 41퍼센트가량에 그쳤지만, 여성 노동자의 투쟁과 조직이 성장한 결과 1999년에는 63퍼센트로 그 격차가 줄었다. 그러나 1997년 경제 위기 이후에는 그 격차가 거의 좁혀지지 않고 있다.

여성 노동에 대한 차별은 높은 비정규직 비율에서도 드러난다. 남성의 비정규직 비율은 40퍼센트가량인데, 여성의 비정규직 비율은 61퍼센트나 된다(2011년 3월). 게다가 남성 정규직 평균 임금을 1백으로 할 때, 여성 비정규직의 임금은 39.2밖에 되지 않는다.

육아 때문에 여성의 사회 진출이 제약받는 조건도 여전하다. 출산 연령기에 여성 고용률은 급격히 줄어든다. 비록 육아가 지나면 여성 고용률이 다시 증가하지만, 이때 여성들을 기다리고 있는 일자리는 대부분 비정규직이다.

이것은 국가의 보육 지원이 너무나 형편없다는 사실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 한국 정부는 출산율과 여성의 노동 참가율을 높이교자 보육 예산을 늘려 왔으나 턱없이 부족했고, 주로 민간 보육시설을 지원하는 방식이었다.

이윤 추구가 우선인 민간 시설은 대체로 보육의 질이 높지 않다. 진정 국가가 보육을 책임지려면 국공립 보육시설이 대폭 확충돼야 하지만 전체 보육시설 중 국공립 보육시설의 비중은 5.3퍼센트밖에 안 된다. 부족한 국공립보육시설과 보육 교사 수는 그대로 둔 채 보육비 지원만 일부 확대한 이명박식 ‘무상보육’ 정책은 보육 교사들을 희생시키고 ‘직장맘’들을 더 난처하게 만들고 있다.

여성 노동자가 하고 걱정 없이 충분한 휴식비를 받으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는 조건도 여전하다.

자본주의와 여성 노동

여성 차별은 자본주의가 노동자들을 착취하며 체제를 유지하는 방식과 맞물려 있다.

‘여성의 노동자화’ 현상 속에서도, 자본주의는 여성들이 집안에서 해야 할 구실을 강조한다. 자본주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려면 건강하고 교육받은 노동력이 끊임없이 공급돼야 하는데, 그러려면 누군가는 노동자들이 제대로 먹고 입고 쓸 수 있도록 뒷바라지해야 하고, 다음 세대 노동력을 길러야 한다. 자본가는 이 부담을 개별 가정의 여성에게 떠넘긴다.

물론 자본가는 여성 노동자를 착취하기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 보육에 투자하지만, 여성을 육아와 가사노동에서 해방시킬 정도로 투자하지는 않는다. 21세기에도 모성과 가족가치가 강조되는 까닭이다.

자본가들은 ‘여성이 본래 있어야 할 곳은 가정’이라는 관념을 부추겨 여성을 부차적 노동력으로 취급하고 여성들에게 싼 임금과 저질 일자리를 강요한다. 여성이 집안에서 하는 구실은 각종 여성 천대의 원인이기도 하다. 여성은 남성보다 열



억압과 착취에 맞선 여성들의 합성 2008년 세계 여성의 날(좌), 2011년 12월 반군부 시위에 나선 이집트 여성들(우)

등한 존재로 취급되고 능력이나 자질보다는 외모로 평가받으며 성폭력·성희롱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자본주의는 또 다른 중요한 경향도 낳았다. 바로 여성들이 노동계급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됐다는 사실이다.

마르크스는 노동계급이 자본주의에서 차지하는 특수한 지위 때문에 노동계급을 주목했다. 노동자들은 평상시에 극심한 노동의 소외를 겪는다. 즉, 삶의 중요한 모든 결정권에서 배제돼 있다. 그러나 노동자들이 집단적 행동, 특히 파업에 나설 때 자본가의 이윤에 큰 타격을 주는 그들의 위력이 드러난다. 노동자들은 단지 착취당하는 불쌍한 대상이 아니라,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진 집단, 즉 “자본주의의 무덤을 파는 자들”이다. 노동계급의 중요한 일부로서 여성들도 이런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여성 노동의 주변화?

그런데 오늘날 여성운동 일각에서는 여성들이 노동자로 대거 진출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여성들이 차별받는 현실을 보며 여성 노동이 주변화됐다고 주장한다.

여성과 남성의 직종 자체가 아예 분리돼 있고, 여성은 노동시장에 진출하더라

도 집안일의 연장인 직종에 몰리고, 보조적이고 주변적인 2차 노동시장에서 주로 일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성별 직종 분리가 여전히 나타나는 가운데서도 여성들은 점점 다양한 직종에 진출해 왔다. 2006년에 여성 노동자의 38퍼센트는 여성의 비율이 30~70퍼센트인 ‘혼성직종’에서 일했다.

또, 여성들이 실제로 그들이 집안에서 하는 일과 비슷한 일을 할 때조차 사회적 노동의 일부로서 하는 것과 집에서 개별적으로 하는 것은 명백히 다른 특성이 있다.

일부는 여성 노동자 중 비정규직이 많다는 것을 여성 노동 주변화의 근거로 들기도 한다. 그러나 현재 여성 노동자의 40퍼센트가량은 정규직이다. 게다가 비정규직이 곧 주변적 일자리는 아니다. 자본주의가 굴러가는 데서 꼭 필요하고 중요한 일자라인 경우가 많고, 모두 잠시 일하다가 금방 그만두는 성격의 일자리도 아니다.

한편, 경제 위기 때 여성 노동자가 우선 퇴출됐다는 주장도 있다. 경제 위기가 여성 고용을 양적인 면과 질적인 면 모두에서 악화시킨 것은 분명 사실이다.

여성 노동자 증가 추세가 일시적으로 꺾였고, 여성 우선 정리해고가 여기저기서 벌어졌다. 특히, 상용직의 비중이 감

소(1996년 41퍼센트에서 1999년 31퍼센트로)했고, 남녀 임금 격차도 정제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여성 노동자 감소폭이 남성보다 특별히 큰 것은 아니었다. 뿐만 아니라, 위기 이후 여성의 노동 참가율은 빠른 속도로 회복됐다. 오히려 1997년 위기 이후에는 여성이 한동안 고용 증가를 이끌었다. 결국, 경제 위기가 여성 노동자들에게 더 큰 고통을 안겨 주긴 했지만,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밀려나는 결과를 낳지는 않았던 것이다.

여성 노동자의 잠재력

이 모든 사실들은 여성 노동자들이 주변화된 희생자가 아니라, 차별과 착취에 맞서 싸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실제로 여성 노동자들은 자신의 삶과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투쟁에서 그 힘을 발휘해 왔다. 그중 가장 인상적인 것은 2007년 이랜드 점거파업과 지난해 대학 청소 노동자들의 파업이었다. 이 두 파업에서 중년의 여성 노동자들은 용감하게 점거 농성에 돌입했고, 남성들을 뛰어넘는 용기와 투지를 보이며 투쟁을 이끌었다.

» 5면으로 이어짐

대학 청소·경비 노동자 투쟁에 지지와 연대를!

“홍익대는 최저임금만 주겠다고 하다가 마지막 교섭에서 겨우 20원 올렸습니다. 우리 소리를 듣지 못하는 이사장님, 병원 한 번 다녀오십시오.”

입학식이 열린던 홍익대 정문, 분노에 찬 청소 노동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지난해 본관 점거 투쟁으로 세상을 놀라게 한 청소·경비 노동자들이 올해 또다시 투쟁에 나서고 있다.

2월 21~23일 공동투쟁에 참가 중인 5개 대학 릴레이 집회는 노동자들의 분노로 가득 찼다. 지난해 투쟁의 성과로 매년 최저임금만 받던 관행을 깨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쟁취했지만, 아직도 임금은 90여만 원에 불과하다. 고려대 조합원은 “물가인상으로 실질임금은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받는 돈으로는 전·월세 유지하기도 힘습니

다. 시급 5천4백10원(노동자 평균임금의 절반)이 무리한 요구입니까?” 하고 말했다.

대학들이 쌓아 놓은 적립금만 10조 원에 이르는데도 청소 노동자 생활임금은 보장해 줄 수 없다는 태도는 파렴치하다. 게다가 최근 대학들이 고위험 주식에 투자했다 손실을 입은 돈이 수백억 원에 달한다. 고려대만 해도 지난해에 2백50억 원을 날렸다.

적립금

지난해 청소 노동자들의 투쟁이 사회적 지지를 받으며 승리하자, 대학 당국들은 복수노조를 만들어 노동자들을 이간질하고 투쟁력을 약화시키려 해 왔다. 홍익대 당국은 법원으로부터 교섭에 나오라는 판결을 받고서야 교섭에 참여하고



대학 청소·경비 직영화가 답이다.

있다. 정부도 복수노조 창구단일화를 요구하며 노조를 압박하고 있다.

대학 당국과 정부가 노조를 압박하는

것은 청소·경비 노동자들의 투쟁이 다른 노동자들의 자신감을 높이고, 6월에 있을 최저임금 결정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미 공공운수노조는 ‘지난해 청소 노동자 투쟁의 성과를 확대하자’며 산별노조 차원에서 생활임금 쟁취를 위한 여성 비정규직 공동투쟁을 조직 중이다. 청소 노동자만이 아니라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 보육 노동자들도 함께 실천단에 참가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정치적 위기와 다가올 총선에 대한 기대 때문에 곳곳에서 노동자 투쟁이 벌어지고 있거나 준비되고 있다. 청소·경비 노동자들의 투쟁이 승리한다면, 이는 다른 투쟁에도 자신감을 불어넣을 것이다.

지난해 청소 노동자들이 승리를 움켜

쥌 수 있었던 비결은 단호한 본관 점거 투쟁과 광범한 사회적 연대 때문이었다. 이 점들을 투쟁에 잘 적용해야만 올해도 승리할 수 있다.

집단교섭

집단교섭 대학이 늘어난 만큼 공동투쟁의 장점을 잘 살려야 한다. 노동자들이 같은 시기에 여기저기서 본관 점거 투쟁에 돌입한다면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고, 노동자들의 자신감도 더 높아질 것이다.

노조의 조직력이 높고 복수노조가 없는 고려대에서 사측이 시급 5천 원을 제시할 뜻을 내비쳤는데, 이런 양보만 때문에 공동투쟁 돌입을 주저할 이유는 없다. 오히려 일부 대학의 양보 분위기를 이용

» 5면 하단으로 이어짐

노동자들



고령의 청소 비정규직 여성들이 투쟁의 선두에 나선 2011년 세계 여성의 날 집회

» 4면에서 이어짐

2007년 당시 이랜드 노조 김경옥 위원장은 “[점거파업 후] 조합원들이 ‘우리가 투쟁에 앞장설 테니 위원장은 따라오기만 하라고 할 정도’라며 여성들의 놀라운 능동성을 증명했다. 청소 노동자들도 “노조가 없는 분들에게 ‘할 수만 있다면 노조를 결성해 자기 권리를 찾아 몇몇하게 일했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싶다”, “애가 울어야 젖을 주듯이, 노동자가 투쟁에 나서야 제 권리를 찾을 수 있다”고 당당하게 말했다.

지난해 말에는 현대차 사내하청 여성 노동자가 민주노총 노동자들, 사회단체 등의 지지와 연대 속에서 직장 내 성희롱에 맞서 통쾌한 승리를 거뒀다. 원청인 현대차는 하청 여성 노동자의 원직 복직

과 가해자 처벌을 약속해야 했다.

이 투쟁들은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도 투쟁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 줬다.

올해도 대학 청소 노동자들이 원청인 대학들을 상대로 생활임금 쟁취 투쟁의 시동을 걸고 있다. ‘무상보육’ 말잔치 속에서 올해도 임금동결이라는 통지서를 받아 든 보육 노동자들도 희생양이 되지 않겠다며 저항하고 있다. 새해 벽두부터 시작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해고에 맞선 여성 노동자들의 투쟁들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런 여성 노동자들의 투쟁 속에 여성 해방의 싹이 자라날 것이다. 여성 노동자들의 투쟁에 전진과 승리를!

최미진

104주년 3·8 세계 여성의 날 기념

민주노총 여성노동자대회

3월 8일(목) 3시 30분, 서울역

공공노조 서경지부

대학 청소 노동자 파업승리 결의대회

3월 8일(목) 1시, 홍익대



» 4면 하단에서 이어짐

해 여전히 완강한 연세대와 홍익대 당국에도 임금 수준을 대폭 올리라고 압박해야 한다.

더구나 시급 5천 원은 이미 지난해 덕성여대 등에서 파낸 수준인 만큼 올해는 조직력이 강한 대학 분회가 투쟁을 통해 임금 수준을 더 올려야 마땅하다.

또 학교 당국이 복수노조를 만들어 노조를 탄압하는 상황에서, 투쟁을 통해 성과를 쟁취해야만 어렵게 결성한 소중한 노조를 지킬 수 있다.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될 학교 당국과의 크고 작은 전투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다.

공공운수노조는 연대 확대를 위해 ‘생활임금 쟁취! 여성 비정규직 공동투쟁연대’를 만들었다. 진보정당과 사회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이런 기구에 더 많은

단체가 참가해야 한다.

학생들의 연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학생들의 연대가 중요하다. 지난해 대학에서 학생 수만 명이 지지서명을 하고 적극적으로 연대한 것이 학교를 압박하는 데 중요한 구실을 했다. 공동의 적을 둔 학생과 노동자들이 “임금을 올리고, 등록금은 내려라”는 요구를 내걸고 함께 투쟁하자. 이미 몇몇 대학에서 공동 캠페인이 시작됐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청소·경비 노동자들의 투쟁을 최저임금 인상 투쟁의 출발점으로 삼고 연대를 건설해야 한다. 현장 활동가들도 기층에서 연대를 확대해 투쟁이 전진할 수 있도록 기여해야 한다.

조명지

여성 투사들은 말한다

윤명순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부지부장, 고려대 청소 노동자

“가만 있으면 임금 올려주는 세상이 아니죠”

최저임금은 시급 4천5백80원, 한 달에 1백만 원 정도예요. 이 돈 받아서는 생활비가 20만 원 정도 적자가 납니다. 외식이나 문화생활은 생각지도 못해요. 노동자들의 현실은 너무 각박합니다.

생활임금을 달라고 지난해에 사측과 처음 집단교섭을 했고 이화여대, 연세대, 고려대에서 임금 인상을 따냈어요. 그리고 하반기에 동덕여대와 덕성여대에서는 시급 5천 원까지 따냈죠. 그래서 올해도 집단교섭에 나섰어요.

근데 교섭에서 사측이 처음에 ‘임금 동결’안을 내놓고, 그 뒤로도 우리가 요구하는 선에 못 미치는 안만 계속 내놓으니까 투쟁을 시작했어요.

올해는 복수노조도 생기고 개악된 노조법 때문에 창구 단일화 문제도 걸려 있어요. 법, 법 하면서 자기들이 법을 잘 지키면 모르겠는데, 유독 노동자들



서경지부 부지부장 윤명순

의 문제만 법 가지고 걸고 넘어져요. 사측들은 조금이라도 틈이 생기면 파고들어서 노동자들을 탄압하려고 노리는데, 이런 법은 이명박 정부가 노동자들 두 번 죽이는 거예요.

상황은 어렵지만 어려운 만큼 힘 있게 싸워 나가야죠. 우리 노동자가 가만히 있는데 ‘아이고, 물가 상승에 맞춰서 비정규직 노동자들 임금 올려 줘야지’ 하는 세상이 아니니까.

악질 사업장은 파업해서 점거에도 들어가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집단으로 시작한 거니까, 일부 대학이 타결되더라도 끝까지 연대하고 다 물러가서 같이 싸워야죠.

파업은 우리에게 마지막 카드예요.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죠. 무조건 이겨야 한다는 마음으로 돌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에서 강한 힘이 나와요.

이게 우리 대학 청소 노동자들의 문제만이 아니고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 저임금 노동자들의 문제이기도 해요. 요즘에는 저임금 노동자 중에 젊은 세대도 많아요. 이 사람들을 우리가 앞장서서 대변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항상 든든한 버팀목이에요. 학생들에게 힘 받아서 힘 있는 투쟁 해 나가겠습니다.

인터뷰·정리 김승주

최보희 공공운수노조 학교비정규직협의회 의장

“대량해고 철회 때까지 싸울 것입니다”

학교 당국은 온갖 잡다한 일들을 비정규직에게 떠넘기고 있어요. 차 접대, 화단에 물 주기, 교무실 청소 같은 일들이 우리의 몫이에요. 심지어 개인적인 일을 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일들을 거부하면 당장 불이익을 받아요.

이번에 [서울시에서] 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가 7백 명입니다.

곽노현 교육감이 상시 직종인 경우 근무 6개월이 지나면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할 것을 ‘권고’하는 지침을 내린 적이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는 학교 교장이 실권을 지니고 있고, 교육청 역시 학교장의 재량권을 인정하고 있어요.

이미 노동부에서는 교육청이 사용자



학교비정규직협의회 의장 최보희

라고 유권 해석한 바 있어요. 강원도와 경기도에서는 교육감이 사용자라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했고, 전북평등지부에서는 전북교육청과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요구를 따 내기도 했습니다. 교육청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노동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이

2004년부터 시작됐으니 벌써 8년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저희는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입니다. 따라서 각 지역 교육청과 중앙 교과부가 단일한 처우 개선 대책을 내야 합니다. 정규직화해야 합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해고될 때 안타깝게도 일부 전교조 선생님들이 이에 동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같은 노동자라는 의식이 결여돼 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 역시 교육 주체입니다.

해고된 노동자들이 학교에서 다시 일할 수 있을 때까지 교육청을 상대로 싸울 것이고 매일 아침 출근 투쟁도 계속할 것입니다.

인터뷰·정리 오정숙

정명화 공공운수노조 부산지역지부 지부장/보육지회장

“거지 밥그릇을 거부합니다”

저는 15년 동안 보육 교사로 일했습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일했지만 ‘내 딸은 보육 교사 안 시킨다. 너무 힘들더라’ 이런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5년차가 넘었는데 1년짜리 계약서를 쓰라고 했습니다. 밥 새우면서 평가인증 준비하는데 왜 수당 안 준니까.

최근 정치인들이 너도나도 무상보육을 약속했습니다. 무상보육 해야 합니다. 비싼 보육비에 시달리는 부모님들 생각하면 당연합니다. 열렬히 환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흑시나 했습니다. 역시나 임금 동결이었습니니다. 보육 교사를 화장실에 편안히 앉아서 볼일 한 번 본 적 있습니까? 따뜻한 커피 한 잔



보육지회장 정명화

끝까지 마셔 본 적 있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철저히 무시당했습니다. 정부는 대한민국의 아이들을 돌본다고 입으로만 떠들었지, 한 번도 우리를 대접하지 않았습니니다. 우리를 길바닥에 버렸습니다. 우리는 거지꼴이 됐고 자존감에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보육 교사의 특성상 자기 권리를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전국의 보육 교사들이 무려 1만 명 넘게 서명을 보내 왔어요. 놀라워요. 정부가 ‘무상보육’을 대대적으로 얘기하면서 기대가 컸지만, 정부가 임금 동결을 발표하면서 억눌려 있던 분노가 터져 나온 것입니다.

정부가 의무교육인 초·중·고등학교의 교사 임금을 책임지는 것처럼, 보육 교사들에게도 여기저기서 나오는 거지 밥그릇 같은 수당을 줄 게 아니라 정부가 책임지고 임금을 보장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환경에서 자라길 원한다면 공공보육이 답입니다.

인터뷰·정리 육오영하

기고

철도를 멈춰서라도 KTX 민영화를 막아야 합니다

박상규 철도 노동자, 노조 대의원

정부는 KTX를 민영화하면 요금도 낮아지고, 서비스도 좋아지고, 삶의 질도 높아질 것처럼 말합니다.

하지만 민영화하면 기업주들은 엄청난 혜택을 얻겠지만, 99퍼센트의 보통 사람들은 얻을 게 없습니다.

노동자들은 저임금과 고용불안과 빚더미에 앉을 것입니다.

‘민영화로 KTX 요금을 낮추자’는 정부의 논리는 그럴싸해 보일 수 있습니다. KTX가 흑자 노선이니, 실제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철도에는 KTX 같은 흑자 노선만 있는 게 아니라 적자 노선도 있습니다. 공항철도, 경춘선, 경의선 모두 적자 노선입니다.

그러나 KTX에서 난 수익을 다른 노선의 적자를 메우는 데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민영화로 이런 ‘교차 보조’를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하거나 적자 노선을 폐지할 수밖에 없겠죠. 이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철도는 필수 공공서비스재입니다. 마땅히 수익이 나지 않는 노선도 운영을 해야 합니다. 요금 인하와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는 KTX를 민간에 팔아넘길 게 아니라, 정부 지원을 대폭 늘려야 합니다. 공공성을 더 확대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철도공사는 지금 철저히 수익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공항철도 직통 노선, 경춘선 ITX는 빠르고 편리하지만 요금이 굉장히 비쌉니다. 돈 없는 사람은 공공서비스에서도 차별받게 되는 것입니다.

안전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경의선은 개통한 지 겨우 2~3년밖에 안 됐는데, 비가 오면 승강장에서 물이 썩니다. 열차 겹수도 주기가 점점 더 길어지고 인원까지 줄다 보니 사고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필수유지업무도 필요 없다

보수 언론들은 ‘철도 대표원 연봉이 6천만 원’이라며 공격하지만, 그러려면 20~30년 이상 근속을 해야 합니다. 그 나이면 대부분 대학생 자녀가 있습니다.

지금 등록금이 얼마나 비쌉니까? 최근에는 전셋값도 폭등해 철도 노동자들 사이에서는 ‘월급 받아서 은행에 다 준다’는



2월 4일 철도노조 결의대회 투쟁 준비를 시작한 철도 노동자들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살기는 힘들어지는데, 임금을 낮춰야 한다는 압력이 너무 심합니다.

민영 회사에선 이런 일이 더 심해질 것입니다.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들은 요금을 더 올리고, 안전 문제는 등한시하고, 인력을 감축할 것입니다.

민영화의 핵심은 비정규직 확대이기도 합니다.

KTX가 민영화되면 지금도 한창인 구조조정이 더 심해질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고용불안입니다. 공사 측은 제가 말고 있는 운수 분야도 외주화하려 합니다. 선로 유지·보수 업무나 전기 업무도 외주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서울·용산·대전·부산·동대구 등 KTX가 지나는 큰 역들은 매표 업무의 90퍼센트 이상을 코레일이 아닌 자회사가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자회사 노동자들의 대부분은 비정규직입니다. KTX 민영화는 이런 현상을 더 부추길 것입니다.

이 때문에 저와 함께 일하는 동료들 사이에선 ‘정부가 민영화를 강행하면 곧바로 파업에 들어가야 한다’는 정서가 큼니다. 일부는 기다리지 말고 당장 파업에 들어가자고도 합니다.

2010년보다 분위기는 훨씬 좋습니다. 지금 동료들은 “필수유지업무고 뭐고 다 필요 없다”, “이래도 불법이고 저래도 불법인데 철도를 제대로 멈춰야 한다” 하고 말합니다.

그동안 노조 지도부는 ‘필수유지업무 조항을 지키면서 합법적으로 파업하자’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막상 파업에 돌입하고 나면 죄다 불법이었습니다.

파업을 하려면 기관사들이 중요한데, 이쪽에서도 불만이 높습니다. 워낙 열차 사고도 많고 이에 따른 과도한 징계도 많기 때문입니다. 열차 사고는 개인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인데 말입니다.

정말이지, 정부가 민영화를 강행하면 즉각 파업에 돌입해야 합니다. 파업의 절차를 따질 때가 아닙니다. 민영화는 우리에게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더구나 현장 노동자들은 이번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완전히 깨지길 기대합니다. 그만큼 자신감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노조 지도부가 더 분명한 투쟁 의지를 보여 줘야 합니다. 그래야 현장에서도 더 효과적으로 조직하고 조합원들의 힘을 모을 수 있습니다.

민영화를 막기 위해 함께 싸웁시다.

》1면에서 이어짐

정말이지, 이제 중대한 결단을 해야 한다. 파업 효과를 극대화해 제대로 “종결” 투쟁을 벌여야 한다.

“우리는 김재철의 액반이가 아니다”라고 선언한 드라마국 PD들도 파업에 동참할 필요가 있다. 1백50억 원 이상의 광고 수익이 예상될 만큼 인기를 끌고 있는 〈해를 품은 달〉이 제작 차질을 빚는다면, 파업 효과는 매우 커질 것이다. 드라마의 인기 만큼 MBC 파업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더한층 뜨거워질 것이다.

MBC·KBS·YTN 방송 3사 공동 파업을 꼭 현실화하고, 더 넓은 연대 투쟁을 건설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실 언론노조 지도부는 그동안 MBC 파업에 열의있게 뛰어들지 않았는데, 더는 그래서는 안 된다. 다행히 언론노조는 최근 대의원대회를 열고 3월 집중 투쟁을 결의했다. 또 언론노조, 민주노총을 비롯해 진보정당과 시민사회단체 등이 ‘MB 방송장악 심판, MB 낙하산 퇴출, 공정정보 쟁취를 위한 공동행동(준)’을 구성하고 연대 건설을 논의하기 시작한 것도 반가운 일이다.

진보진영은 이 파업을 집중 염호하며 우파 결집과 위기 탈출을 시도하는 정부를 압박해야 한다. 방송사 파업을 중심으로 최근 곳곳에서 터져 나오는 투쟁의 기운들을 모아낸다면, 그 힘은 배가 될 것이다.

소은화

MBC 노동자들

“끝까지 싸워 공정 방송을 지키겠습니다”

“김재철 사장의 횡포와 불공정 방송에 대한 분노가 차올랐습니다. 김재철 씨가 물러나지 않으면 아예 총선 방송도 포기하고, 팟캐스트로 보도를 하겠다는 결심까지 하고 있습니다. MBC 파업으로 한국의 언론 문제에 관심이 커지길 바랍니다. 공정방송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 청와대를 차지한 세력이 자기네 마음대로 방송사 주요 자리에 인물을 내려보내 좌지우지하는 현실을 바꿔야 합니다.”

- 최승호 PD

“제가 2001년에 입사했는데, 역대 파업 중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비조합원들도 노조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이번 파업은 MBC만이 아니라, 언론 전체를 지키기 위한 대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 3사가 공동 파업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꼭 이겨야 합니다. 끝까지 갈 필요가 있습니다.”

- 사회부 기자

“6년 전 입사한 이래로 아이템 기획단계에서부터 컷 당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일이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파업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2010년 파업 때보다 더 절박합니다. 그때 MBC가 걱정했던 모든 일들이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김재철 사장이 파업에 강경 대응하기 시작했는데, 우리의 투지는 오히려 더 솟고 있습니다.”

- 이미영 PD

“2010년 파업은 시행착오의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김재철은 끝장 파업을 해서 몰아낼 수 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걸 깨달은 것은 큰 교훈입

2002년 철도·발전·가스 공동 파업 10주년

민영화를 중단시켰던 역사적인 투쟁

이명박 정부가 다시금 민영화 카드를 꺼내 들었다. 정부는 최근 KTX 민영화에 반대하는 대중적 여론에 밀려 요금 인하, 재벌기업의 지분 소유 제한 등을 제시했지만, 이런 꿈수는 민영화 강행 의사만 분명히 보여 줄 뿐이다.

그런 점에서, 민영화의 재앙을 막기 위한 투쟁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바로 10년 전에 민영화를 저지한 값진 투쟁 경험이 있다. 2002년 철도·발전·가스 노조의 공동 파업이 그것이다.

2001년 11월부터 ‘국가기간산업 민영화 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가 결성됐고, 민영화가 예정된 철도·발전·가스 노동자들이 연대 파업을 준비했다. 2월 25일 역사적인 공동 파업이 시작됐다. 민주노총은 2002년 2월 26일 10만 명이 참가한 연대 파업을 조직하고 전국에서 집회를 열었다.

38일

공공 3사 파업은 전국을 뒤흔들며 김대중 정부를 심각한 위기로 몰아넣었다.

특히 무려 38일 동안 지속된 발전 노동자들의 영웅적인 파업은 국민 여론의 81퍼센트가 발전소 매각에 반대하게 만들었다. 발전 파업 승리를 위한 민주노총과 공공연맹의 연대 집회도 연달아 열렸다. 전국 각지로 뿔뿔이 흩어져 ‘산개 파업’을 했던 발전 노동자들에게 수많은 노동자와 활동가들이 숙식을 제공했고, 승리를 응원했다.

이 때문에 지배계급 일부는 분열했다.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국회의원 26명은 “발전소 매각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 … 정부는 더는 강경책으로 노조를 자극하지 말라”고 했다. “이번에 밀리면 끝장”이라는 불안감이 정부를 엄습했다.

결국, 이 투쟁은 정부의 민영화 정책을 중단시키는 성과를 낳았다. 정부는 그 후로도 10년 동안이나 철도·발

전·가스 산업을 민간에 팔아넘길 수 없었다.

2002년 파업은 노동자들의 단결과 파업이야말로 민영화를 저지할 가장 효과적인 무기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 줬다. 오늘날 이런 투쟁이 다시 조직된다면 얼마든지 이명박의 KTX 민영화 추진을 분쇄할 수 있다.

물론, 지난 투쟁의 약점에서도 배울 필요가 있다.

효과적 무기

2002년에 발전노조와 함께 파업에 돌입했던 철도노조와 가스노조가 ‘공동교섭·공동타결’ 원칙을 어기고 먼저 복귀한 것은 아쉬운 일이었다. 두 노조가 타결을 미루고, 모두 승리할 때까지 공동 행동을 지속했다면 완벽한 승리를 얻었을 것이다.

가장 뼈아픈 실수는 파업 38일째인 4월 2일, 민주노총 지도부가 이미 시작된 2차 연대 파업을 철환한 것이었다. 전국의 대공장 노동자들이 파업 집회를 위해 서울로 출발하고 각 연맹이 서울도심 곳곳에서 집회를 시작한 상황에서, 지도부가 확실한 양보도 없는 ‘노·정 합의’에 서명하고 파업 중단을 선언한 것은 분명한 잘못이었다.

결국, 민주노총 지도부는 잠정 합의문을 파기하고 전원 사퇴해야 했다. 이런 비민주적인 일은 결코 반복돼선 안 된다.

한편, 당시 ‘산개 전술’은 효과적이지 않았다. 38일이나 버틴 노동자들의 높은 투지는 놀라웠지만, 동료들과 격리된 채 삼삼오오 숨어 지내면서는 집단적 자신감과 파업 대오의 자긍심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았다. 거점에 집결해 파업 대열의 힘과 사기를 높이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물론 경찰력의 거점 침탈에 대비한 연대와 지원이 중요하다.

지금, 철도노조가 KTX 민영화에 맞서 파업 등 본격적인 투쟁 준비에 착수했다. 2002년 공공 3사 파업의 교훈을 되새기는 것은 이번 투쟁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 제작기술국 노동자

“20년차 선배 1백여 명 이상이 파업 지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퇴직을 앞둔 사람들, 보직 부장들이 흔들렸습니다. 파업 대열은 늘고 있습니다. 사측이 대체인력 투입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도 노조가 새로 계약직으로 들어온 사람들을 끌어들이어야 합니다.”

- 촬영팀 노동자

인터뷰·장리 오정숙, 김지현, 소은화



우석균 칼럼

한미FTA와 총선, 그리고 진보정치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건강과 대안 부대표

한미FTA 발효일자가 3월 15일로 확정됐다. 국회 날치기 통과 직후에는 발효일자를 1월 1일이라고 말하던 한국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발효일자가 보름 간격으로 계속 늦춰지더니 결국 미국이 말하던 발효일자에 가까워진 것이다.

애초에 한미FTA 발효일이 총선과 가까워지면 총선 쟁점이 된다고 걱정하던 새누리당과 이명박 정권에게는 매우 안 좋은 소식이다. 미국이 한국 정치 일정보다는 미국의 FTA 이행법 101조에 따른 ‘한국의 이행과제 점검’이라는 마지막 숙제 검사를 더 중요하게 여긴 탓이다. 이 숙제 검사에는 날치기 처리한 14개 법안과 시행령 개정 등의 법안 개정 점검을 포함한다.

그러나 이것만일까? Inside US Trade를 보면, 미국이 기대했던 발효일자는 핵안보정상회의의 오바마 방한 시점인 3월 29일이었다. 한국 정부는 실무접점에는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는다고 1월 발효를 말했다. 맞는 말이다.

미국의 숙제 검사가 생각만큼 수월하지 않았던 것은 한국의 이행과제가 단순히 법개정만이 아니기 때문이다. 미국 오바마 행정부는 의회에 한미FTA 발효 후 1년 안에 미국산 쇠고기 개방을 약속했다. 또 미국이 추진하는 환태평양 FTA, 즉 TPP에 한국이 어떻게 가입할 것인지도 미국의 관심사다.

이 문제들이 포함되는 것은 물론 한국 국민들이 보기에는 말이 안 되는 법 개정이라 할지라도 미국이 보기에는 마음에 안 드는 이행법 내용의 재개정 문제도 숙제 검사에 포함돼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물론 그 내용을 알 수는 없다. 대한민국 정부는 발효과정 논의는 외교상의 비밀이라고 알려 줄 수 없다고 한다. 한미FTA는 그 협상 전체가 비밀이었고, 이제 협정문이 완료된 상태에서도 무엇이 이행점점인지 국민들은 전혀 알 수 없다. 한미FTA는 벌써부터 ‘헌법 위의 헌법’인 것이다.

발효날짜를 앞당김으로서 한미FTA를 총선의 쟁점에서 가능한 제외해 보려던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은 작전

을 바꿔야 했다. 이른바 정면돌파가 시도되고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 박근혜 대표가 포문을 열었다.

박근혜 씨가 2월 13일 “한미FTA가 그토록 필요하다고 강조하고서는 이제 와서 정권이 바뀌면 없던 일로 하겠다는 데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하자 조중동도 일제히 나섰다.

2월 14일 <중앙일보> 1면 머릿기사는 ‘한·미 FTA 총선 최대 쟁점으로’였고, <조선일보>도 ‘박근혜, 아와 전면전 선언’을 1면에 내걸었다. 심지어 요즘 상당히 조용해지신 듯한 이명박 대통령조차 “과거 독재시대도 아니고 외국 대사관 앞에 찾아가서 문서를 전달하는 것은 국격을 매우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한마디 보냈다. 트위터를 검색하려 하고 앱을 삭제하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께서 ‘독재’와 ‘국격’을 말하는 것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정부와 여당이 총동원된 것은 분명해 보인다.

총동원

이번에도 문제는 민주당이었다. 민주당이 민주통합당이 됐어도 대응은 똑같았다. “노무현과 이명박의 한미FTA는 다르다”가 민주당의 답이었다. 안타깝지만 그럴 수밖에 없다.

한미FTA 체결 당시 국무총리였던 한명숙 씨가 지금 민주통합당의 대표다. 또 한미FTA 체결 당시 열린우리당의 정책위의장이자 한미FTA 평가위원장을 맡아 합격점을 준 인사가 지금 민주통합당의 원내대표인 김진표 씨다. 김진표 씨는 당시 한미FTA 서비스 분야의 개방수준이 낮아 “교육, 의료분야에서는 한미FTA를 한 번 더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까지 했고, 이번에도 “선 비준 후 재협상”안에 사인을 해줘 지금 새누리당이 국회 날치기를 두고 ‘사실상 합의처리’라고 주장할 근거를 준 당사자다. 이들이 주장할 것이 달리 무엇일까?

노무현과 이명박의 한미FTA는 다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상징화돼 정치적 비판이 금기시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주장은 그럴듯해 보일 수도 있



2월 25일 한미FTA폐기 집회. 한미FTA 발효는 한미FTA 폐기 투쟁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이다.

다. 그러나 정치적 상징이 사실관계까지 바꾸지는 못한다. 민주당이 내세우고 있는 10개 독소조항 중 노무현 정부 때 체결된 FTA와 다른 것은 자동차 관련 조항 하나뿐이다. 투자자 정부 중재 제도(ISD)나 역진방지, 공기업에 대한 민영화 조처, 의약품 가격인상, 중소기업 보호 불가 등등은 모두 노무현 때의 한미FTA와 전혀 다르지 않다.

2008년 경제 위기로 상황이 달라졌다는 민주당 일각의 주장도 일부는 사실이다. 그러나 한미FTA 내용은 2008년 경제 위기로 더욱 문제가 커진 것뿐이지 2008년 이전에도 문제는 다르지 않았다. 바뀐 것은 노무현 정부 시기의 지금 민주당은 여당이었고 지금은 야당이라는 사실뿐이다.

노무현의 FTA와 이명박의 FTA는 다르다는 주장이 근거가 없는 그만큼,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기세를 올릴 만도 하다. 어떻게 보아도 말이 안 되는 ‘야당 심판론’까지 들고 나온다. 보수원조를 자처하는 당답게 ‘왜 말을 바꾸었나’ 시리즈는 탈핵선언과는 거리가 먼 민주당

의 ‘원전재검토’ 입장에 대해서조차 핵에 대한 입장이 바뀌었다고 비판하고 제주 해군기지 문제까지 이어진다.

여기서 새삼스럽게 민주당이 왜 시원스럽게 치고 나가지 못하는가를 묻지 말자. 민주당은 보수정당이다. 또 개혁주의적 야당이 정권을 잡는 과정에서는 필연적으로 길들이기 과정을 거친다.

길들이기

조중동이 그리고 전경련이 한미FTA를 국익에 도움이 되는 협정이라고 지면을 기사와 광고로 도배하는 것이 단지 민주당 집권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판단하는 것은 너무 좁게 보는 것이다. 심지어 진보정당이라 하더라도 집권 과정이나 의회를 장악하는 과정에서 자본가들은 이 정당을 길들인다.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그러한 과정의 일부일 뿐이다.

지금 민주당이 왜 인적 쇄신을 하지 못하는지, 왜 더 확실하게 자신의 입장을 진보적인 입장으로 확실하게 정리

하지 못하는지를 묻는 것은 민주당이 보수정당이라는 한계를 보지 못하는 것이다.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은 ‘민주당은 왜’가 아니다. 진보정당은 어디에 있나?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이다. 노무현의 한미FTA는 이명박의 한미FTA와 함께 모두 폐기시켜야 할 것이라는 점, 일본의 핵 사고 이후 나아갈 방향은 탈핵이고 대체에너지 체제라는 점, 그리고 제주해군기지는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밝혀야 할 주체는 민주당이 아니다. 고용이나 등록금, 교육, 의료 모든 문제가 그렇다. 문제는 민주당이 아니라 진보정당이고 사회운동이다.

민주당은 한미FTA 폐기를 주장한 적이 없다. 이것이 선거 시기라고 바뀔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지나치게 순진한 발상이다. 선거 시기에 선거를 무시하는 일은 바보 같은 일이다. 야권연대가 불가피하면 야권연대로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선거야 야권연대 모두가 대중의 고통을 실제로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정치가’ 문제지만 이제 평범한 사람들이 묻는 것은 ‘어떠한 정치인가’다. 여기에 대해 ‘닥치고 정치’를 이야기하고 ‘노무현과 전태일의 만남’이나 ‘야권연대’를 통한 반MB만을 이야기하는 것으로는 진보정당과 사회운동이 나아갈 길은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진보정치의 차별성이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야말로 정치’라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다. 그것은 사람들이 고통받는 문제를 실제로 해결하기 위해 신자유주의와 자본주의의 폐해를 넘어서는 진보정당과 사회운동의 전망이다.

사람들이 보고 싶은 것은 민주당과 새누리당의 지루한 정치공방이 아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총선 시기 한미FTA 논쟁 과정에서 진보정치와 사회운동의 신선한 목소리다. 또 진보정치가 보여 줄 수 있는 미래의 전망과 선거과정의 열린 공간을 통해 터져 나오는 사회운동과 그에 헌신하는 진보정치가 보여 줄 희망이다.

시리아 저항은 반제국주의를 강화한다

주디스 오어 영국의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편집자

한때 시리아 대통령 바샤르 알 아사드의 동맹이었던 팔레스타인 저항단체 하마스가 최근 공개적으로 시리아 정권을 맹렬히 비판했다. 시리아 정권이 반제국주의를 대표한다면 환상도 확실하게 산산조각났다.

하마스 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아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자유와 민주주의, 그리고 개혁을 위해 분투하고 있는 영웅적인 시리아 민중에게 경의를 표한다.”

좌파 일부와 반전 운동의 일부는 여전히 시리아 정권이 팔레스타인과 레바논 헤즈볼라 운동의 친구라고 잘못 인식하고 있다. 그래서 아사드 정권을 공공연하게 방어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시리아 정권의 성격과 이에 맞서는 투쟁의 성격에 대한 논쟁들이 생겨났다.

튀니지 지도자 지네 엘 아비디네 벤 알리와 이집트 독재자 호스니 무바라크가 무너졌을 때는 모든 게 분명했다. 누구도 자국 국민들을 통제하기 위해 엄청난 보안대를 이용했던 서방의 악랄한 동맹자들에게 환상을 갖고 있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 아래로부터 도전받고 있는 정권이 서방을 반대했었고 모순적인 동맹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논쟁은 더 복잡해졌다.

서방 권력들은 지금 시리아 반정부 세력의 일부를 완전히 지지하고 있다. 이 세력들은 시리아 도시 흠스에 대한 끔찍한 폭격을 중단시키려고 국제적 지원을 호소하고 있다. 이 점 때문에 시리아의 저항이 ‘제국주의의 도구’라는 입장을 어느 정도 신뢰하는 이들도 있다.

힐러리 클린턴이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와 함께 ‘시리아의 친구들’ 정상회담을 열어 시리아 저항을 지원할 방안을 논

의하는 것은 당연히 역겹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동시에 미국의 지지를 받아 바레인에서 민주적 시위를 파괴하는 것을 지원하고 있다.

생사를 건 투쟁

그렇지만 이것이 시리아 혁명이 제국주의의 꼭두각시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수만 명이 지난 11개월 동안 거리로 나왔고 수천 명이 목숨을 잃었다. 그중 일부가 서방의 원수 같은 적들에게 지원을 요청하는 것은 그들의 끔찍한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지 외국 지배에 대한 열망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다.

당연히 반정부 시위대는 단일한 정치조직이 아니다. 일부는, 특히 시리아국가 위원회는 서방권력과 거래를 바란다. 하지만 흠스와 다른 반정부지역에서 공격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독재자로부터 자유를 쟁취하려고 생사를 건 투쟁을 벌

이고 있다.

시위가 처음 벌어졌을 때 시위대는 평화로운 변화라는 희망을 품고 있었다. 하지만 시위대는 개혁이 아니라 폭력적인 탄압에 직면했다. 그 뒤 운동은 더욱 전투적으로 변했고 정권 퇴진 요구가 지배적인 것이 됐다.

이 투쟁은 중동을 변화시키고 있는 거대한 투쟁 물결의 일부다. 수십 년을 지배했던 정권들이 몰락했다.

이런 투쟁이 제국주의의 동맹에 미치는 파장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리비아나 시리아에 대한 개입은 서방 지배자들이 앞으로 중동에 대한 자신들의 주도권에 대해 우려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이러한 개입에서 성공할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은 이런 개입을 인도주의적 임무라고 포장하는 것이다.

우리는 서방이 리비아에 개입하는 것이 인도주의적 임무가 아니라 진정한 혁

명을 납치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리아에 대해서도 우리는 똑같은 입장이 다.

서방의 가장 중요한 동맹자는 사우디아라비아다. 서방과 사우디아라비아는 시리아에서의 학살을 이용해 다른 대중적 저항을 납치하려고 협력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국주의 개입에 반대할 때 항상 ‘아랍혁명에 승리를’이라는 구호와 연결시켜야 한다. 혁명이야말로 진정으로 반제국주의를 건설하는 힘이다.

수백만의 평범한 사람들이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들의 앞날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진정한 용기와 결단력을 보여 줬다. 이 아래로부터의 투쟁들이야말로 중동의 민중들이 서방의 패권과 자국의 독재자들로부터 해방된 삶을 누릴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

출처 <소셜리스트 워커> 2292호

번역 최용찬

통합진보당 청년 국회의원 비례 후보 경선 출마자 김지윤

“국회 안팎에서 99퍼센트의 저항을 건설하겠습니다”

통합진보당 청년 국회의원 비례 경선 “위대한 진출”에 출마해 다섯 명의 후보와 경선 중인 **김지윤 후보**를 만나서 출마의 의미와 포부를 들었다.

김지윤 후보의 웹사이트 <http://kij2030.com> 에서 약력, 출마의 변과 57지 약속, 다양한 활동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위대한 진출” 측에서는 10만 선거인단을 모집하고 있다. 모집기간은 3월 8일(목) 오후 6시까지다. 선거인단 등록은 <http://great2030.org>에서 할 수 있다.

통합진보당 청년비례 국회의원 후보 경선 출마를 결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돈봉투가 관례처럼 돼 있는 새누리당은 지금의 청년 문제를 키워 온 장본인입니다. 저질 일자리 양산에도 이 정부가 앞장서 왔죠.

민중통합당도 지금 공천 때문에 말이 많은데요, 사람들은 역시나 실망이라더라 반응이에요.

특히 민주통합당은 지금 청년들이 고통받는 문제의 원인을 만들었죠, 등록금 인상, 용인해 줬고, 비정규직 약법도 민주당 정부 아래서 통과됐죠, 한국 사회에 신자유주의를 확산시키는 데 일조한 정당이에요.

그런 점에서 진보정당만이 진정으로 청년문제를 대변할 수 있는 정당이라고 생각해 출마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2005년 이진희 명예박사 학위 수여 반대 시위, 2006년 출고와 정기농성, 2008년 촛불항쟁 등을 거치며 끊임 없이 투쟁해 왔는데, 그런 경험에서 가장 중요하게 배운 것은 무엇입니까?

출고 농성 하면서 제일 많이 배운 건데요, 지지와 사회적 연대라는 게 실제로 굉장히 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출고 투쟁 2년 동안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았지만 그럴 때 마다 이 투쟁을 이어갈 수 있었던 건, 첫 번째가 투쟁의 의의 때문이라면 두 번째는 사람들의 지지 때문이었어요.

만약에 사람들의 지지와 연대가 없었다면 고려대 당국이라는 큰 권력을 이길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진희 시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시위 초기에 마녀사냥이 만연했는데 그때도 전 사회적인 지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옳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특히나 삼성으로부터 탄압받던 노동자들의 지지가 큰 힘이 됐죠.

역압받는 이들이 함께 싸우는 것이 승리하는 데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던 것 같아요.

여러 경력과 정점을 내세운 후보들 중에서 특히 본인이 비례후보가 돼야 하는 이유를 꼽는다면요?

국회의원 1인이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을 세력화하고 저항을 건설하는 데 기여하는 국회의원이 되고자 한다는 점에서 저만의 특징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진희, 고려대 당국, 이명박 정부 등에 맞서서 끊임 없이 싸워 왔고 그 과정에서 지지를 쌓아 왔다고 자부하고 싶어요, 한 가지 덧붙이면 제가 국제적 연대를 분명히 얘기하는 후보라는 점인데요.

오늘날 청년 문제는 고장난 자본주의가 전 세계 99퍼센트 청년들에게 위기의 고통을 전가하면서 발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에 대한 반발로서 전 세계 청년들이 저항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고, 그런 저항의 국제 연대를 건설하겠다는 것도 저만의 특징인 것 같아요.

또 저는 반값등록금, 불안정 노동과 아르바이트 등에서 한다면, 청년유니온, 청년회 등이 해 온 노력과 성과를 적극 지지하면서 협력적으로 함께할 자신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앞장서서 통합진보당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면서도, 통합진보당의 진보적 정체성과 노동 중심성을 더 강화하는 데 기여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선거 출마 때문에 투쟁을 건설하는 데 소홀해지는 것은 아니냐는 물음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것을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까요?

저는 거리와 대학에서 운동을 건설하던 활동의 일부로서 운동의 목소리를 대변하려고 출마했습니다. 사람들의 자신감을 불러일으키고 투지를 키우는 활동을 하고자 나왔어요.

오늘날 청년들의 불만은 들끓고 있고 지구 한편에서는 국제적 저항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을 한국에서도 발전시키고 싶어요.

‘삼포세대’가 우리 세대를 특징짓는 언어로 들리지만, 사실 우리 청년들은 2003~2004년 반전 운동, 2008년 촛불항쟁 등에서 저항의 주역이었잖아요, 한국에서도 99퍼센트의 저항을 불러일으키는 데 기여하고 싶고 그런 방향으로 선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만약 국회의원이 된다면 엄청난 압력에 노출될 것인데, 99퍼센트의 목소리가 되겠다는 초심을 지킬 수 있으려면 무엇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제가 출마하면서 발표한 약속 다섯 가지 중 첫 번째가 모든 부정의한 특권을 거부하겠다는 것이예요, 그 약속 다섯 가지를 기억하는 게 저의 초심을 잃지 않게 하는 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누구의 지지와

누구의 후원으로 당선하고 활동하느냐가 그 사람의 행보를 결정하는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또, 저는 국회 안팎에서 모두 싸우는 사람이 될 겁니다. 진보 정당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끌려나오거나 눈물을 흘리는 한이 있어도 끝까지맞서 싸우는 모습을 볼 때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박수를 보냈어요, 저도 그런 국회의원이 되고 싶습니다.

급진적인 정책과 공약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까요?

모두 복지를 말하는데 복지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에 대해서는 제대로 말하고 있지 않아요, 특히 새누리당은 재원 마련에 대해서 잘 얘기를 하지 않죠.

재벌들이 지난해에 사상 최대의 이익을 냈는데도 노동소득분배율은 점점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그런 점에서 부자증세가 중요하합니다.



들의 강력한 투쟁이 복지국가를 이루는 데 핵심이었잖아요.

‘99퍼센트에게 권력을’이라는 구호가 인상적인데, 김지윤 후보가 진정으로 바라는 사회는 무엇입니까?

오늘날 이 세계의 1퍼센트 권력자들은 단지 의회·정부만이 아니라 경제적 권력을 틀어쥐고 있고, 이들이 대다수 사람들의 삶을 좌우해요, 그런 점에서 이집트에서 벌어지고 있는 저항과 혁명은 대단히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닌가 해요, 그곳에서는 99퍼센트의 억압받는 민중들이 독재자를 몰아내고 투쟁하는 과정에서 미래의 사회를 건설해 나가려고 서로 토론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회의 불평등과 불의에 맞서서 싸우는 사람들이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 가는 주역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게 99퍼센트에게 권력이라는 구호가 함축하고 있는 바입니다, 인터넷·영화 이동업

김지윤의 10가지 정책 공약

청년에게 희망을

1. 국공립대부터 무상교육, 학자금 대출 부채 탕감
2. 청년실업수당 80만 원, 공공서비스와 녹색 일자리 100만 개
3. 삼포세대는 가라 —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공공임대주택 확충
4. 경쟁 교육 No! 대학평준화 Yes!

1%와 맞짱 뜨자

5. 부자 증세로 시민에게 복지를
6. 국방비 삭감, 징병제 폐지
7. 민영화 반대, 주요 기간산업 국유화

99%의 목소리

8. 비정규직·정리해고 없는 세상
9. 한미FTA, 폐기만이 정답이다
10.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자, 학벌 차별 반대

※ 김지윤 후보 웹사이트(<http://kij2030.com>)에서 정책에 대한 자세한 해설과 정책공약집도 볼 수 있다.

국내·국제 투사들의 지지 목소리

김지윤의 고대병원 청소노동자,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고려대 분회 병원 대표

지윤이 학생은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마다, 임금 투쟁 할 적마다 앞장서서 열심히 우리 어머니들을 도와줬



이강택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삼성 재벌의 정황에 맞서고 많은 분들에게 힘을 주었던 맑고 뜨거운 청년 촛불 김지윤 씨의 출마를 적극 지지합니다.

양형근 금속노조 생용차지부 조직실장, 생용차 해고자

저는 해고가 없는 세상을 보고 싶습니다. 소수의 이익을 위해 일터에서 쫓겨난 노동자와 뺨박받고 소외된 99퍼센트를 위한 정치를 기대합니다. 김지윤 씨가 그런 구실을 해 주길 바랍니다.

그리스의 진보적 의원·의원들

그리스의 노동자들과 청년들은 자본주의의 위기를 노동자들과 가난한 사람들에게 전가하려는 은행가들의 잔혹한 시도와 긴축정책에 맞서 힘차게 싸우고 있습니다.

함께한다면 우리는 더욱 힘차게 싸울 수 있을 것입니다. 김지윤 씨의 승리를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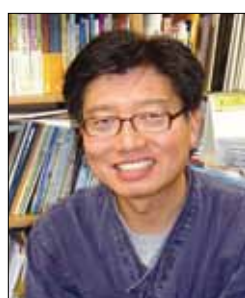
페트로스 콘스탄티노스 (아테네 시의원), 카테리나 파프리카오우 (페트로폴리 시의원), 아나스 코우트라스 (중부마케도니아 주의원), 토니아 라하나오토우 (아이오니아제도 주의원), 세라메임 리조스 (크라티 주의원), 파노스 기르가나스 (주간지 (노동자연대) 편집장), * 시의원, 주의원들은 그리스와 반자본주의 연합체인 인터비타로 소속입니다.

이종란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상임활동가

2005년, 삼성 이진희 회장의 철학박사 학위 수여 저지 투쟁은 탄압받은 삼성노동자들에게 정말 통쾌한 일이었습니다. 그 투쟁을 이끌었고, 그간 노동자들의 투쟁에 연대해 온 김지윤 후보는 청년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과 건강권 확보를 위해서도 제대로 싸울 수 있는 후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건투를 빕니다!

강수를 고려대 교수, 조치원 신안리 천 마을이장

나는 일반적으로 국회와 의회 정치 전반을 신뢰하지 않는 편이다. 그러나 김지윤 같은 사람이 큰 뜻을 품고 국회를 간다면 나는 조건 없이 그를 지지한다.



윤주양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학생회장

일관되게 99퍼센트를 위해 행동했던 지윤 선배와 함께한다면 경쟁 교육, 살인 교육이 아닌 참교육 또한 실현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제가 본 김지윤 씨는 20~30대들이 느끼는 고통이 있는 자리마다 계속 같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김지윤 씨가 출마를 한다니, '아 저런 정도의 청년이라면 한국의 20~30대를 충분히 대표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성진 경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제가 김지윤 씨를 지지하는 것은 단 하나, 김지윤 씨야말로 어떤 악조건에서도 의회에서 사회주의자로서 99퍼센트를 위한 반자본주의 대중 투쟁을 지지해 줄 분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존 몰리뉴 전 영국 포츠머스 대학교 교수이자 저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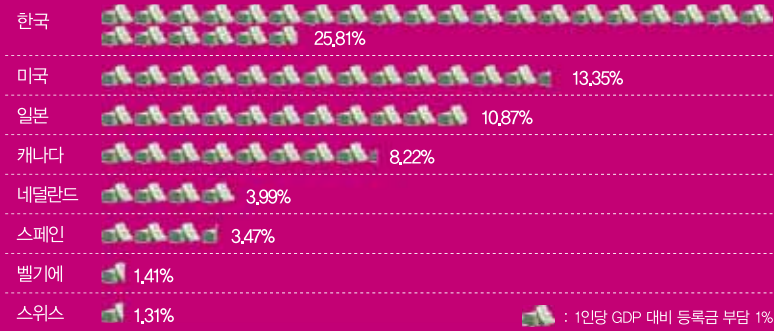
김지윤 씨와 함께 이집트 혁명의 밑거름이 된 카이로회의에 참석했던 사람으로서, 김지윤 씨가 이집트 혁명은 물론 독재자와 자본주의에 반대하는 국제 투쟁들과의 연대를 선거 공약으로 내건 것을 보고 매우 기뻐했습니다.

※ 김지윤 후보의 웹사이트에서 지지 목소리 전문과 더 많은 지지 목소리를 볼 수 있다.

김지윤이 바꾸려는 ‘3포’ 세대의 현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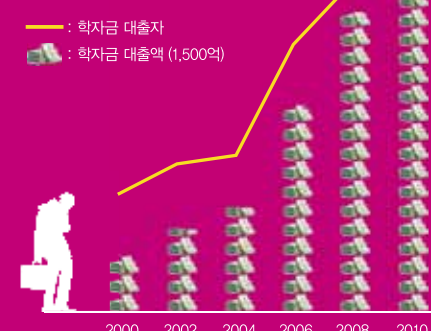
등록금 부담 OECD 1위

한국의 1인당 GDP 대비 등록금 부담률은 2위인 미국의 거의 3배로 세계 1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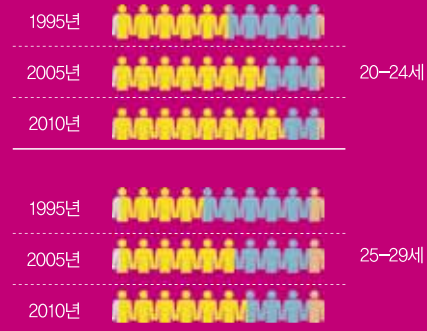
늘어난 가는 학자금 대출

11년 사이에 대출자는 3.4배, 대출액은 6배 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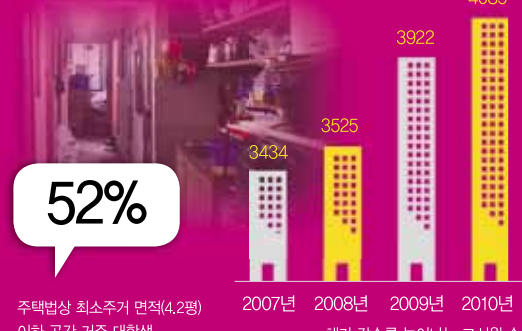
전세에서 월세로

집값 부담이 매년 늘어나고 있다.



좁막 청년들

청년들은 비싼 월세를 줄이려고 점점 적은 방으로 돌아가고 있다.



내 집 마련하기

먹지 않고, 입지 않고, 숨쉬지 않고(?)



청년실업률 16.7% 시대, 요람에서 빛더미까지

한 명의 인간이 성인이 되기 위해서는 2억 6천2백40만 원이 필요하다.



그리스 민중의 투쟁은 우리 모두의 투쟁이다

이 글은 남아프리카공화국 킵레프트(Keep Left), 스페인 엔루차(En Lucha), 영국 사회주의 노동자당, 아일랜드 사회주의 노동자당, 타이 턴레프트(Turn Left), 터키 혁명적 사회주의 노동자당, 한국 다함께 등 국제사회주의 경향(ST) 주요 단체들이 최근 공동으로 발표한 성명서다.

1. 현재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은 죄다 긴축 정책을 펴고 있다. 대형 은행의 투기 행각이 초래한 전 세계적 경제 위기에 대응해 서방 지배계급은 위기의 대가를 노동자와 빈민들에게 떠넘기려 하고 있다. 이런 공공 지출의 삭감 때문에 전 세계 성장률이 낮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지배자들은 긴축을 더 많은 신자유주의 ‘개혁’을 추진할 기회로 삼고 있다. 그 ‘개혁’ 때문에 금융시장이 통제를 벗어나면서 위기가 왔는데도 말이다.

2. 불행히도 현재 그리스는 신자유주의 ‘개혁’의 실험실이 됐다. 최근 유로존 나라들은 두 번째 그리스 ‘구제’ 금융에 합의했다. 그러나 이 조처는 주로 그리스에 돈을 빌려 준 프랑스와 독일의 은행들을 구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런 의도는 별도의 계정에 예치된 구제 금융이 프랑스와 독일의 은행들에게 먼저 지급되도록 조처한 것에서 노골적으로 드러났다.

3. 은행들을 구제하는 과정에서 평범한 그리스인들은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 그리스 경제 활동은 1930년대 대공황에 버금가는 속도 — 2011년 마이너스 7퍼센트였고 올해도 비슷할 것이다 — 로 위축되고 있다. 실업자, 노숙자, 자살하는 사람이 속출하고 있다. 무료 급식소에 의존해 연명하는 사람들이 폭증했다. 반면에 부자들의 재산은 철저히 보호받는다. ‘트로이카’(유럽중앙은행,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 IMF)는 더 긴축하라는 압력을 계속 넣었고, 그리스 주류 정당들은 더 끔찍한 추가 긴축 정책 — 최저임금 22퍼센트 삭감, 보조 연



2월 19일 긴축에 반대하는 그리스 시위대 — 그리스 투쟁이 승리한다면 전 세계의 긴축 정책도 타격을 입을 것이다.

금 15퍼센트 삭감, 공공부문 일자리 1만 5천 개 감축 — 을 도입했다.

4. 긴축 정책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민주주의는 철저히 무시됐다. 그리스와 이탈리아에는 ‘기술 관료’ 정부가 등장했다. 심지어 북유럽 정치인들은 4월에 치러질 예정인 그리스 총선을 연기하라고 요구했다. 트로이카가 정부 운영에 간섭하면서 그리스의 경제적 주권은 완전히 사라졌다. 소외 진압 경찰들은 항의 시위 참가자와 파업 노동자 등을 무자비하게 공격했다. 민주주의 파괴는 그리스의

문제가 아니다. 지난해 11월에는 아일랜드 정부의 새해 예산안의 세부 내용이 아일랜드 의회보다 독일 의회에 먼저 제출된 것이 밝혀지기도 했다

5. 유럽 지배자들은 그리스를 시범 케이스로 삼아 다른 곳의 긴축 반대 움직임을 약화시키려 한다. 그러나 유로존의 비밀 보고서가 잘 지적했듯이, 그런 목표는 성취하기 힘들다. 공공지출 삭감은 일자리와 서비스 수요를 줄이고 경제 활동을 위축시켜 부채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더 힘들게 만든다. 긴축 정책은 고대 신화에

등장한 시지프스의 노동 — 미끄러운 바위를 언덕 위로 올렸다 미끄러져 내려오는 것을 반복하는 — 과 다를 바 없다.

6. 다행히도, 그리스 노동자 운동은 유럽에서 가장 전투적이다. 그리스 노동자들은 긴축 정책에 맞서 총파업과 대형 시위를 벌여 왔다. 기층 노동자들은 노조 지도자들에게 더 급진적 행동을 벌이도록 압력을 넣고 있다. 그리스 양대 주류 정당은 분열하고 자기 정당 소속 의원들을 축출하면서 총체적 난국에 빠져 있다. 여론조사를 보면, 사회자유주의 정당인

그리스사회당의 원편에 있는 정당들이 포함 40퍼센트의 지지율을 얻고 있다. 그리스 노동자 투쟁을 지지하는 혁명적 반자본주의 좌파가 성장하고 있다.

7. 그리스의 저항이 더 강력해지고 더 명료한 초점을 갖게 된다면 긴축·신자유주의와 단절하는 정책 강령을 만드는 초석을 놓을 수 있다. 여기에는 부채 상환 거부와 유로존 탈퇴 등의 정책들이 포함될 것이다. 이들의 목적은 그리스 자본주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 국유화와 공공투자 프로그램 확대에 토대를 두고 일자리, 공공서비스와 생활수준 향상을 최우선으로 삼는 정책들의 뼈대를 건설하는 것이다. 이런 정책들을 도입하려는 노력은 단지 기존 민주주의 제도를 방어하는 것만이 아니라, 노동자가 경제의 더 많은 부분을 통제하면서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더 큰 투쟁의 일부가 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자본주의의 혼란과 불의를 대체할 수 있는 민주적 사회주의 계획이라는 좀더 근본적 목표를 성취하는 데 한 걸음 다가설 수도 있다.

8. 그리스 노동자, 학생과 빈민들의 투쟁은 우리의 투쟁이기도 하다. 만약 그리스 투쟁이 승리한다면, 다른 곳의 긴축 정책도 타격을 입을 것이다. 만약 그리스 투쟁이 패배하면, 긴축을 영구적 정책으로 채택한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정책을 실행하기 더 쉬워질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의 긴축 반대 투쟁에 연대를 보내야 한다. 단지 저항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자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각자 나라에서 긴축 반대 운동을 효과적으로 건설할수록 그리스의 형제와 자매들이 승리할 가능성도 커진다.

러시아 반푸틴 저항은 어디로

3월 4일 러시아 대선을 앞두고 푸틴 반대 운동도 성장해 왔다. 마이크 헤인즈는 반푸틴 운동이 러시아 지배자들에 대한 도전과 결합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마이크 헤인즈는 월버햄튼 대학교 역사학 교수이며, 《러시아: 계급과 권력 1917~2000》(Bookmarks) 등 러시아에 관한 책을 여러 권을 저술했다.

러시아에 대한 사람들의 예측은 특하면 빗나간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석유 수출 호황에 힘입어 질서를 회복했고 러시아를 “관리 민주주의” 체제로 만들었다. 그러나 이제 러시아는 잘못 관리된 것으로 보인다. 경제 위기로 푸틴의 인기는 하락했고 사람들은 푸틴 정부의 부패를 더 용납하기 어려웠다.

푸틴이 2012년 대통령으로 복귀하며 2024년까지 그 자리에 머물 수 있다는 소식이 발표되자 사람들은 환멸감을 토했다. 그러나 2011년 9월에 시위를 벌인 사람은 수백 명에 그쳤다. 내년 대선 예정연습인 12월 두마(러시아 의회) 선거에서 저질러진 부정에 항의해 수만 명이 시위를 벌이는 상황이 도래할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제 낙관주의자가 된 과거의 비판주의자들은 푸틴과 그 일당들의 종말이 온 것이 아닌지 묻는다.

미래를 확실히 예측할 수는 없지만 푸틴이 시계를 거꾸로 돌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공식 통계를 보면 12월 두마 선거에서 푸틴의 러시아통일당은 과반에 약간 못 미치는 표를 얻었다. 이것은 2007년 총선에서 얻은 득표율 64퍼센트에 한참 못 미치는 것이다. 그러나 많은 이는 이번 선거에서 러시아통합당의 실제 득표율은 35퍼센트에 그칠 수 있다고 말한다.

사람들은 푸틴과 주변 인사들을 대놓고 비판한다. 푸틴은 이제 정체가 소련을 통치했던 옛 지도자 브레즈네프에 비교된다. 사람들은 푸틴이 얼굴 주름을 없애려고 보톡스를 주입했다는 얘기를 하며 그를 조롱한다. 푸틴이 반푸틴 시위 참가자들의 리본을 콘돔에 비유하자 재치있는 사람들은 ‘푸틴주의’가 일종의 성병이기 때문에 콘돔이 필요하다고 응수했다.

성병

따라서 푸틴 정권은 민족주의적 주장 — 현 정부에 반대하는 자들은 외국의 사주를 받았다 — 과 약간의 후퇴와 온건한 탄압을 결합해 대응해야 했다. 정부는 반부패 활동가이자 블로거인 알렉세이 나발니를 포함해 시위 지도자들을 감옥에 가렸지만 그들의 의지는 꺾이지 않았다.

지금 새로운 시위가 계획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한판 불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2월 4일 모스크바에서 열린 푸틴 반대 시위 — 반푸틴 운동은 푸틴에 맞서 싸울 방안과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만큼 앞으로 싸움이 더 힘들어질 것이다. 러시아에서는 정권 인사들이 변화의 열망을 좌절시키려고 유명 정당과 가짜 야당인사들을 이용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한다.

아랍의 봄은 미리 정해진 저항 방식보다 정치적 창의성이 더 효과적임을 보여줬다. 나발니가 권력자들을 “사기꾼과 도적들로 구성된 무리”로 비판한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줬다.

그러나 어떤 투쟁이든 진정한 성과를 거두기 위해 적응해야 하는 보편적 요소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첫째, 저항 운동은 대중에게 더 깊

이 뿌리를 내려야 한다. 반푸틴 시위는 1993년 이후 러시아에서 발생한 최대의 정치 행동이지만 연금 삭감에 항의해 2백50만 명이 항의를 벌인 2005년 시위에는 한참 못 미친다.

현 시위를 ‘중간계급 시위’로 나태하게 규정하는 것은 잘못이지만 참가자 수는 수만 명에서 수십만 명으로 확대돼야 한다. 나발니는 인터넷에서는 영웅이지만 이번 시위 전에 그의 이름을 들은 러시아인의 비율은 고작 7퍼센트뿐이고 아직도 많은 사람이 그를 모른다.

둘째, 반푸틴 운동은 푸틴에 맞서 싸울

적절한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두마 선거 이전에 어떤 사람들은 선거 보이콧을 주장했다. 공식 통계상으로 40퍼센트의 유권자들이 투표에 참가하지 않는다. 나발니는 푸틴을 제외한 누구에게 투표를 해도 상관없다고 주장했다. 푸틴 정권을 망신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입장이 단기적으로 호응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온갖 가짜 대안이 판치는 상황에서 “푸틴만 아니면 된다”는 입장은 장기적으로 올바른 입장일 수 없다.

셋째, 공정 선거 요구와 부와 권력을 장악한 자들에 대한 도전을 결합해야 한다. 2008년 세계 경제 위기가 닥쳤을 때 러시아 부자들은 다시 한 번 러시아의 부를 강탈해 해외로 빼돌렸다.(특히 더러운 돈의 출처를 묻지 않는 영국으로)

잡지 <코머산트> 편집자가 “옛먹여라 푸틴”이 적힌 무효 투표 용지 사진을 게재하자 푸틴 친구인 알리셔 우스마노프는 즉시 편집자를 해고했다.

대선에서 승리하려면 푸틴은 최소한 50퍼센트를 득표해야 하지만, 그의 현 지지율을 볼 때 이것은 쉽지 않다.

이 경우 푸틴이 권좌에 남으려면 지난 12월 선거 부정은 우습게 만들 엄청난 선거 부정을 저질러야 한다.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월간지

《소셜리스트 리뷰》 2012년 1월 호

번역 김용욱

후쿠시마 핵 재앙 1년

재앙을 딛고 일어서는 일본 반핵 운동

지난해 후쿠시마 사고 때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사태를 수습하기는커녕 정보를 은폐하며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겼고, 결국 일본의 평범한 사람들이 고스란히 그 피해를 당했다.

일본은 지진과 화산 활동이 활발한 지역인데도 쓰나미에 대한 대비는 핵발전소를 운영하는 민간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하도록 내맡겨져 있었다. 이윤 창출을 목적으로 핵발전소를 운영하는 도쿄전력은 비용을 생각하며 대비를 하지 않았다.

사고 직후 일본 정부는 충분한 과학적 근거도 없이 국민들이 더 많은 방사선에 노출돼도 안전하다면서 안전 기준을 대폭 완화해서 '방사선 관리를 포기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사고 이전에는 국제 기준을 따라 1년에 1밀리시버트(mSv) 이하 방사선까지만 허용했는데, 사고 이후 20밀리시버트로 늘렸기 때문이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사용하면 핵발전소에서 새어 나온 방사능 물질이 어떻게 퍼질지 예측할 수 있다. 일본은 세계 최고 수준의 시뮬레이션 기술을 갖고 있지만, 정부와 도쿄전력이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활용할 수 없었다. 결국 한 차례 방사선 먼지가 지나간 이후에야 대피령을 받은 주민들도 있다.

시뮬레이션

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 다 돼 가지만, 핵발전소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대응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

방사성 플루토늄이 발전소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검출됐는데, 이는 적어도 1개 이상의 원자로에서 노심이 녹았고 또 대기 중에 노출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높은 방사능 수치 때문에 접근이 어려워져 아직도 원자로가 얼마나 파손됐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핵발전소가 완전히 봉쇄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하수는 계속 오염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핵발전소 반경 20킬로미터(자전거로 약 1시간 20분 거리)의 좁은 지역만을 위험지역으로 분류했는데, 그



2012년 1월 14~15일 일본에서 열린 '탈핵세계대회' 대중적 반핵 운동만이 핵 없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

이상 떨어진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대피를 해도 '자발적 대피'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주에 따른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모순이게도, 일본 정부는 해당 지역에 계속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그들이 이동한 장소와 자녀들에게 먹인 음식 등을 매일매일 기록해서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안전하다는 발표를 자신들도 믿지 않는 것이다.

이 때문에 발전소 인근 지역 주민들은 자원봉사에 의존해서 '시민 방사선 측정소'를 운영하고 있다. 여기서 자신들과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 방사선에 피폭되는지 수치로 측정하고, 섭취하는 음식의 안전 여부를 확인한다. 또 정부의 발표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직접 측정한 방사선 수치를 일일이 기록하면서 수치가 높아지는 날을 경계하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지난해 말 총리 노다 요시히코는 핵발전소 문제가 해결됐다

고 선언하며, 반핵 여론 때문에 멈춰선 핵발전소들을 올해 안으로 다시 가동시키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핵발전소들이 모두 지진 대비 테스트를 통과했다고 말하지만, 사고의 원인이 된 원자로와 냉각기를 잇는 파이프가 왜 망가졌는지도 규명하지 못했다. 반핵 운동가들은 파이프가 지진 때문에 파손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는데 정부가 이 파이프들은 스트레스 테스트에 포함시키지도 않았다고 폭로했다.

핵 무장 야욕이 있는 일본 정부와, 핵발전으로 돈을 버는 도쿄전력, 규제기관인 일본 원자력안전보안원은 서로 끈끈히 연결돼 있기 때문에 다시금 핵발전을 강행하려고 한다.

재가동

일본의 반핵 운동가들은 이들에 맞서고 있다. 정부가 핵발전소 재가동 수순을 밟기 위해 준비 중인 보고서 발간에 반대하

고, 사고의 경위를 정확히 파악하기 전까지는 일본 전역의 핵발전소들을 재가동을 하지 말라고 요구하고 있다. 또한 핵발전소 인근 주민과 국민들에게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고, 대피 지역을 확대하고, 이주민 지원을 늘리라고도 요구하고 있다.

많은 활동가가 방사능에 특히 민감한 아이들의 안전을 우려하는 여성들이다. 정부로부터 고발될 우려 때문에 이들 중 일부는 익명을 쓰면서도 국제적인 반핵 운동의 경험을 배우고, '점거하라' 운동, FTA 반대 운동, 오키나와 미군기지 반대 운동, 해의 파병을 금지한 평화헌법을 지키기 위한 운동 등과 결합하면서 곳곳에 활동하고 있다.

반핵 운동의 요구는 매우 정당할 뿐만 아니라 현실적이기도 하다. 그동안 핵발전소 지지자들은 핵발전 없이는 인류가 단 하루도 살 수 없을 것처럼 떠들어 왔지만, 지난 1년 동안 일본의 54기 핵발전

소 중 52기를 중단시켰는데도 대규모 정전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다.

또한 전문가들은 일본 내 재생가능 에너지만으로도 2020년까지 전체 전력 사용량의 43퍼센트를 충당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핵발전소가 감당해 온 30퍼센트를 훌쩍 뛰어넘는 수치다. 더구나 일본의 인구는 2050년까지 빠르게 감소할 예정이어서 미래의 전력 수요 때문에 핵발전소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은 거짓이다.

폭발 사고가 벌어진 일본에서 핵발전소가 재가동되면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핵산업계는 더욱 핵발전을 확대하려고 들 것이다. 지난해 핵발전소 폭발 직후, 독일에서는 거대한 반핵운동이 분출하면서 정부로부터 2022년부터 핵발전소 가동을 전면 중단시키겠다는 양보를 이끌어낸 바 있다. 이런 종류의 대중적 반핵 운동이 필요하다.

김중환

핵 없는 세상을 위해 전진하자

장호중

지난해 3월 11일에 일어난 후쿠시마 핵발전소 1~3호기 폭발은 이제 역사상 최악의 핵발전소 사고로 남았다. 이 사고로 누출된 세슘의 양은 히로시마에 핵폭탄이 떨어졌을 때의 무려 1백68배나 된다.

최근 발표된 보고서를 보면, 사고 직후 일본 정부는 3천5백만 명이 사는 도쿄 일대를 포기하는 것까지 검토할 정도로 상황은 위험천만했다.

1년이 지났지만 이 사고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핵반응로 내부 온도는 여전히 오르락내리락하고, 방사선 농도가 너무 높아 지금도 냉각 작업을 오랫동안 할 수 없다.

지금 상태라면 하루 4시간씩 격일로 일해도 1년이면 일반인의 평생치 허용치의 2천 배가 넘는 방사선에 노출된다.

후쿠시마 재앙 이후 전 세계 반핵 운동은 빠르게 행동에 나섰고 의미있는 진전을 이뤘다.

독일 메르켈 정부는 2022년까지 모든 핵발전소를 폐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탈리아에서도 핵발전을 재개하려던 정부의 계획이 무산됐다. 수십 년 만에 도쿄에서 수만 명이 장외 집회를 열었다.

한국에서도 반핵 여론이 유례없이 높아졌고 박원순 서울시장 등 40여 지자체장이 공동으로 핵발전소 폐기 선언을 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매년 하던 원자력 선호 여론조사를 지난해에만 건너뛰었다.

현재 일본 핵발전소 54기 중에 단 두기만 가동되고 있지만 '전력 대란'은 일어나지 않고 있다. 4월이 되면 이 두 기의 핵발전소도 정기 점검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스리마일

물론 주요 선진국 지배자들이 핵발전을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당장 미국 오바마 정부는 스리마일 섬 사고 이후 34년 만에 신규 핵발전소 4기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그럼에도 독일과 일본의 사례는 핵발전소가 불가피한 선택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 준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재앙으로 가는 역주행을 계속하고 있다.

최근 <마이니치 신문>이 "한국이 도쿄전력의 원전기술자 스카우트를 시도하고 있다" 하고 보도했다. "도쿄전력은 핵재처리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핵무기 기술을 수입하려 하는 것 아

니냐 하는 의혹도 제기됐다.<<연합뉴스> 2월 16일치.)

현재 진행 중인 한미원자력협정에서 한국 정부가 재처리 시설 허가를 요구하고 있는 것도 이와 관련 있다. 위키리크스는 한국 정부가 계속해서 재처리 시설을 보유하려 했다는 사실을 폭로하기도 했다.

나아가 이명박 정부는 삼척과 영덕을 신규 핵발전소 부지로 선정하며 핵발전 확대를 재촉하고 있다. 아랍에미리트에 이어 터키와 동남아시아에도 핵발전소를 수출하려 한다.

이명박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독일이 프랑스에서 전기를 갖다 쓴다"는 거짓말

대중적 반핵 운동을 향하여

70여 시민·사회단체가 결성한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1년을 맞아 3월 10일 서울 시청에서 대규모 반핵 집회를 열 계획이다.

이날 집회는 많은 반핵 활동가들의 바람대로 한국에서 대중적인 반핵 운동의 일부 전진을 알리는 계기가 돼야 한다. 그러려면 반핵 활동가들은 핵발전의 진실을 알리는 데 매진해야 할 뿐 아니라

까지 하며 핵발전을 폐기하면 전기료를 40퍼센트나 올려야 한다고 협박했다.

이는 새빨간 거짓말이다. 독일은 유럽 내에서 전기를 수출하는 나라고 핵발전 의존도가 높은 프랑스야말로 세계 6위의 전기 수입국이다.

핵발전 비용은 이제 더는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보다 싸지 않다. 핵발전을 폐기하고 재생에너지로 전환한다고 전기요금을 올릴 필요는 없다. 이런 전환은 일자리를 늘려 실업 문제에도 도움이 된다. 전환에 필요한 돈은 그동안 핵발전 사업으로 엄청난 이윤을 벌어들인 기업들과 싼 값에 전기를 써 온 대기업들에게서 세금을 거둬 마련

대중 행동을 조직하는 데도 힘을 쏟아야 한다.

그런데 공동행동 내 일부 단체들은 이번 집회의 주요 행사로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기획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의 에너지 절약은 전체 전력사용량을 줄이는 데 별 도움이 안 된다. 그 양이 산업계의 전기 사용량에 한참 못 미칠 뿐 아니라 전기난방기 등 전기 사용량이 많은 제품들의 효율 규

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약삭빠르게도 핵발전에 대한 민주통합당의 모호한 태도를 이용하려 한다. 이명박은 한명숙 대표가 집권 시절 "원자력 5대 강국으로 진입해야 한다" 하고 말한 것을 파고들었다.

사실 통합 전 민주당의 당론은 '원전 재검토'라는 모호한 것이었다. 게다가 최근 민주통합당은 핵폐기장 건설에 찬성표를 던진 정일순에게 총선 후보 자격을 줬다.

진보진영은 민주통합당의 모호한 태도에 휘둘리지 말고 단호한 반핵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

제가 너무 약화돼 있기 때문이다.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다.

무엇보다 가뜰이나 경제 위기 고통전가로 내핍을 강요당하고 있는 99퍼센트의 사람들에게 더 아껴 쓰라고 하는 것은 대안이 아니다.

공동행동은 개인의 절약이 아니라 정부와 핵산업계에 맞서는 집단적 행동 건설에 주력해야 한다.

대법원의 현대차 불법파견 최종 판정

이제 원·하청 단결 투쟁으로 나갈 차례다

대법원이 현대차 불법파견을 최종 확정 판결했다. 법정을 나선 노동자들은 “10년 동안 차별받았던 세월들, 탄압 속에 버텨 왔던 시간들과 설움을 씻게 된 기분”이라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있기까지 수많은 노동자들이 구속·수배·해고를 당했다. 이런 처절하고 끈질긴 투쟁이야말로 이번 판결을 낳은 진정한 힘이다.

이번 판결로 현대·기아차뿐 아니라, 제조업 전반과 민간서비스·공공부문 등까지 널리 퍼져 있는 사내하청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그래서 경총은 “산업현장과 노동시장의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판결이라고 불평했다. 불법파견으로 엄청난 이득을 얻어 온 기업주들의 노심조사를 보여 주는 것이다.

이번 판결의 직접 대상인 현대차의 2년 이상 1차 사내하청 노동자들만이 아니라, 1만 1천여 명에 이르는 현대·기아차의 2·3차까지 포함한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들, 노동부 발표로만 33만 명에 이르는 전체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정규직으로 직고용돼야 한다.

불법적인 차별을 2년이 지날 때까지 참고 기다릴 이유는 하나도 없다. 그동안 불법파견 착취를 통해 자본가들이 빼돌린 돈도 모두 토해내야 한다. 지난해 현대차가 거둔 순이익의 2퍼센트만 돌려도 모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가능하다.

그러나 현대차 사측은 “사내하청은 기업 존속의 유일한 대안”이라며, 고작 3백~4백 명만 정규직화할 수 있다는 얘기를 흘리고 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면, 정규직의 노동강도가 세지고 고용안전판이 사라진다’며 이간질도 시도하고 있다.



대기업주들은 자신들이 불리할 때 법을 무시한다. 대법원 판결은 끝이 아니라 투쟁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하는 이유다.

따라서 2010년 현대차 비정규직 점거파업 이후 다시 한 번 투쟁의 기회가 열린 지금,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정규직·비정규직의 단결과 투쟁 조직을 시작해야 한다. 이번 판결을 “노동계가 투쟁 확산의 기회로 활용할 것”이라는 경총의 우려를 현실로 만들어야 한다.

투쟁의 기회

무엇보다 정규직 노조·활동가들의 연대가 중요하다. 2010년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이경훈 집행부의 배신은 숏친 투쟁에 찬물을 끼얹었다. 이후 비정규직 지회도 위기를 겪었다.

경제 위기가 심화되는 지금, 비정규직은 정규직의 방패가 아니며 비정규직에 대한 공격은 정규직에 대한 공격의

서막이다. 따라서 비정규직 투쟁 연대는 정규직 자신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정규직·비정규직 단결 투쟁의 가능성은 있다. 현대차지부가 연초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정규직 노동자의 85.7퍼센트가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위해 노조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현대차지부 문용문 집행부는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주간연속2교대제 시행을 주요 사업으로 발표했고, 3월 초에는 현대차·기아차 노조의 공동투쟁본부도 구성된다.

“주간연속2교대제와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핵심 요구로 삼아 구체적인 투쟁 계획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비정규직지회와 공동으로 집회도 할 것입니다.”(현

대차지부 이양식 조직강화실장)

이런 공동 투쟁은 더 확대·강화돼야 한다. 그래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투쟁이 승리할 수 있다는 전망을 보여 줘야 한다.

다행히, 대법원 판결 이후 집회 참가자가 세 배 넘게 늘어나는 등 이전보다 더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관심을 갖고 모이기 시작했다. 비정규직지회는 조직을 추스르는 일도 서두르고 있다.

금속노조도 3월 말 집중 투쟁을 실질적으로 건설해야 한다. 이것은 한 차례 집회로 끝나서는 안 되고, 파업 등 더 큰 투쟁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돼야 한다. 현장 활동가들이 이런 투쟁을 건설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모승훈·김기선



“해결책은 정규직화고 과제는 투쟁입니다”

2월 23일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 낸 주역인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최병승 동지를 만났다. 그는 2002년 현대차 울산공장에 입사해 정규직화 투쟁을 벌이다 2005년 해고됐다. 그리고 2010년 25일간의 점거 파업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아직까지 수배 생활을 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비정규직지회가 2005년부터 투쟁해 온 결과물입니다.

이미 2004년에 노동부는 현대차 사내하청이 불법파견이라고 판정했지만, 오히려 노동자들은 2006년까지 계속된 투쟁에서 1백여 명이 해고되고 5백여 명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류기혁 열사가 자결했고, 최남선 동지가 분신했습니다. 2010년 7월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투쟁 과정에서 50여 명이 해고됐고 황인화 동지가 분신했습니다.

사측이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에 폭력과 탄압을 가했던 것과 이에 대해 사과 한마디 하지 않는 것에 화가 납니다.

이번 판결은 저 한 사람의 정규직 지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대자동차의 사내하청은 불법이라는 것, 제조업 사내하청 전체가 불법이라는 것을 확정한 것입니다. 사내하청이라는 고용관계는 폐지돼야 하고,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확인됐다고 봅니다.

당연히, 문제 해결책은 정규직 전환입니다. 단 하루를 일해도 사내하청은 불법이기 때문에 모두 정규직이 돼야 합니다.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비정규직 3지회가 슬기롭게 ‘모든 사내하청 정규직 전환’ 요구를 제시해야 합니다.

사측은 이를 시행할 것 같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또 정당한 요구를 갖고 투쟁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금속노조 차원에서 제조업 작업장 전체에서 비정규직 조직화 계획을 세워 사내하도급 폐지 투쟁을 벌여야 합니다. 이 투쟁이 미조직 작업장으로도 확대돼야 합니다.

인터뷰·정리 정동석 현대차지부 4공장 현장위원장

지금 당장 직가입 운동을 전개하자

김우용 기아차지부/금속노조 중앙위원

현대차 불법파견 판정은 자본과 노동 진영 전체를 들썩이게 하고 있다.

문제는 지금부터 어떻게 싸울 것인가다.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면 내부의 단결과 공동 투쟁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정규직 노조와 활동가들이 나서 함께 싸워야 한다. 이것은 민주노조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과거 이경훈 집행부의 파업 파괴 행위 때문에 쏟아졌던 비난을 일소하고 광범한 지지도 모을 수 있을 것이다.

원하청 공동 투쟁은 주간연속2교대 투쟁과 비정규직 정규직화 투쟁을 결합시켜 폭발력을 더 할 것이다. 이미 문용

문 집행부는 이 두 쟁점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했다.

젊고 분노에 찬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한다면, 정규직 노조에도 큰 활력과 힘이 될 것이다. 여기에 노조 통합까지 이룬다면, 조합원이 1만 명 가량 늘어날 것이고 활력과 전투력은 막강해질 것이다.

노조 통합은 반드시 필요하다. 형식과 절차에 얽매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대법원 판결을 따르더라도 하청 노동자들은 당연히 정규직 노조의 조합원이 돼야 한다. 비정규직 동지들을 정규직지부로 직가입시키는 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여야 한다.

일부 활동가들은 노조 통합이 비정규

직의 독자성과 투쟁을 제약한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조직 형식이 아니라 내부의 민주성, 투쟁성, 연대성에 달린 문제다. 2010년 현대차 비정규직 점거파업 때, 단일 노조가 아니었는데도 이경훈 집행부가 투쟁에 악영향을 미쳤던 것을 보라.

일부에선 기아차의 노조 통합을 나쁜 사례라고 주장하지만, 이것도 사실이 아니다. 기아차에서 통합 전에 8백여 명이었던 비정규직 조합원 숫자는 1천8백여 명으로 증가했다. 식당 여성 노동자, 청소 노동자까지 대부분 노조에 가입돼 있다.

기아차에선 물량 변동에 따라 수백 명이 해고되는 아반적인 일은 없을 뿐

아니라, 현장 투쟁을 이유로 사측이 징계를 남발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됐다. 현대차 공장에는 2·3차 하청 노동자들이 수천 명 존재하지만, 기아차에는 이 규모가 90여 명밖에 되지 않고, 이마저도 2011년 입단투에서 1차 하청 정규직으로 전원 채용됐다.

물론, 기아차 내에서 정규직·비정규직 사이의 모든 차별이 없어졌다는 주장은 아니다.

그러나 노조 통합이 노동자들의 단결을 강화하고, 공동 투쟁의 가능성을 넓힌다는 점은 분명하다.

정규직 활동가들과 비정규직 투사들이 힘을 합쳐 대대적인 직가입 운동을 벌이자.

쌍용차와 희망텐트 투쟁 — 김득중 쌍용차지부 수석부지부장

“우리도 희망을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한진중공업 투쟁이 타결된 이후 조합원들로부터 문의 전화가 많았습니다. 희망버스가 우리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에게 새로운 기운을 불어 넣었고, 희망을 꿈꾸게 했습니다.

그래서 ‘희망텐트’ 투쟁을 시작했습니다. 짧은 준비기간이었지만 전국의 금속노조 조합원들을 비롯해 많은 분들이 함께했습니다. ‘3차 포위의 날’까지 매번 규모가 늘었습니다. 그동안 생계를 꾸리느라 투쟁에 동참하지 못했던 조합원들도

1백여 명 이상 함께했습니다.

금속노조가 쌍용차 투쟁을 조직하면서, 새로운 투쟁의 기운을 느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현장에 고용불안이 심각하다 보니 쌍용차 문제가 더는 남의 일로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예전 같으면 세 차례나 1박2일 투쟁을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동안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투쟁과 정치적 투쟁은 분리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올해는 이런 일이 반복돼선 안 됩

니다.

쌍용차 투쟁이 그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쌍용차 대량해고 문제는 단지 해고된 당사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리해고가 만연한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리해고 문제를 전면화시키겠다는 포부를 갖고 서울에서 ‘4차 포위의 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이 지난 4년 동안 정부의 노

동유연화 정책에 맞서 잘 싸우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희망버스 투쟁이 보여 줬듯, 그동안 억눌려 온 분노가 한데 모이고 있습니다. 조직된 노동자뿐 아니라 해고나 비정규직으로 고통받았던 미조직 노동자들도 거리로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올해 이런 힘이 폭발적으로 분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거에서 표로도 심판해야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의 힘으로 싸워 이기는 것입니다.

‘고용이 불안정하니 악착같이 일해서 벌자’는 보수적인 분위기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노동자들도 불안이 높지만 선뜻 앞에 나서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장 활동가들의 구실이 중요 합니다. 주변 동료들이 느끼는 불만을 앞에 나서 제기하고 운동을 건설하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투쟁을 조직한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정리 조영지

탈북민 북한 강제 송환에 반대해야 한다

이정원

중국 정부의 탈북민 강제 송환을 둘러싸고 논란이 뜨겁다.

체포된 탈북민들의 한국 내 가족들은 2월 13일 국가인권위에 긴급구제를 요청했다. 그리고 지난 주말 이미 9명이 송환됐다는 보도가 흘러나왔다.

우선, 중국 정부가 “불법으로 국경을 넘은 월경자”일 뿐이라며 탈북민들을 끔찍한 박해가 기다리는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는 것은 중단돼야 한다.

특히 지난해 말 김정은 북한 노동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이 “김정일 사망 애도 기간”에 탈북하면 즉결 처분하라는 특명을 내렸다고 알려진 상황이다.

이 때문에 한국에 정착한 탈북 청소년 수십 명도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중국 대사관 앞에서 복송 중지를 호소했다.

무엇보다 강제 송환 위기에 처한 탈북민의 가족들이 느끼 애끓는 심정은 이해하고도 남는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며칠 만에 1만 4천 명의 탄원 서명을 받았다.

우파 결집용 카드

중국 정부는 ‘불법 월경한 불법 체류자’를 돌려보내는 것은 주권 국가의 권리’라고 말한다. 이 주장은 한국 정부를 비롯해 서방 정부들이 미등록 체류 이주민, 난민 신청자를 강제 추방할 때 흔히 하는 말이다.

그래서 자신의 입기 동안 이주민 수천 명을 강제 추방했고, 중국 등 제3국에 대규모 수용 시설을 만들어 탈북민을 수용하려 한 이명박이 중국 정부를 비판하는 것은 지독한 위선이다.

무엇보다 이명박과 보수 우익 단체들은 탈북민의 압도 다수가 경제적 이유로 북한을 탈출해야 하는 처지에 내몰리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강경하게 대북 지원 중단을 추진해 왔던 자들이다.

중국대사관 앞에서 단식농성을 하고 있는 자유선진당 박선영은 제3국에 탈북민수용소 설립을 적극 촉구해 온 인물이다. 또 일관되게 대북 식량 지원을 반대해 왔다. 2010년에는 수해를 입은 북한에 식량 지원조차 반대했던 자다.

이처럼 북한 주민들이 굶어 죽든 말든 신경도 안 쓰던 자를 지금 조종동이 ‘탈북자의 대모’라고 추켜세우는 것은 역겨워서 봐주기 힘들 정도다.

심각한 정치 위기로 몰리던 이명박과 우파들은 탈북민 문제를 오로지 우파 결집과 위기 탈출에 이용하기 위해 발악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취임 4년 기자회견에서 이 문제를 거론한 이명박이 박선영에게 전화해 “좋은 계기를 만들어 주어 고맙다”고



악어의 눈물 북한 식량 지원에 반대해 온 박선영 등 우파들이 탈북민 카드를 이용하는 것은 위선이다.

한 것은 여러모로 의심심장하다.

우파들은 한국 진보진영의 일부가 탈북민 문제에 침묵하거나 직시하지 않으려 하는 약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간파하고 이용하려 한다.

따라서 우리는 탈북민 가족들이나 평범한 사람들이 이번 강제 송환에 반대하며 중국 정부에 항의를 하는 것과 이명박과 우파들이 탈북민 카드를 이용하는 것을 구분해서 봐야 한다.

미중갈등과 탈북민

한국 정부의 비판에 중국 정부는 강제 복송을 강행하며 강경한 대응을 보이고 있고, 미국 의회는 3월 5일 긴급청문회를 열어 북한 인권 문제를 두들길 태세다.

그러나 미국이 북한 인권을 운운하는 것 역시 말이 되지 않는다. 2004년 미국에서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이후 2011년 말까지 미국에 입국한 탈북 난민은 불과 1백26명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잘 보여

주듯이 미국은 탈북민들의 고통에 무관심했다. 또 해마다 멕시코에서 미국 국경을 넘는 이민자들이 수백 명씩 죽어 가는 현실을 보라.

어쨌든 이제 이 쟁점은 국제적 정치와 세력 관계 하에 놓이게 됐다.

여기에는 미국과 중국의 밀접하면서도 갈등하는 관계가 반영돼 있다. “중국 은 북한의 불안정이 대량탈북 사태를 낳아 중국 사회의 불안 요인이 되거나, 미국·일본·한국에 개입 빌미를 줘, 실제로는 중국을 견제하는 군사적 위협을 부르지 않을까 우려한다.”(“김정일 사후 북한의 앞날 - 유물론적 분석”, <레프트21> 72호)

미국도 이 쟁점을 이용해 중국을 견제·압박하고 또 북한과의 협상에서 우위를 잡하는 기회로 삼길 원한다.

결국 탈북민 카드를 이용해 서로 압박하고, 그것에 대응하는 세력 모두가 평범한 탈북민들의 고통에는 진정한 관심이 없는 것이다.

탈북민들의 고달픈 처지

한국 내 탈북민 수는 2012년 1월까지 2만 3천 명이 넘었고, 2006년 이후 해마다 2천 명 이상이 한국으로 들어오고 있다.

한국 정부는 2000년대 중반 이후 탈북민의 한국 입국 규모가 급격히 늘기 시작하자 탈북민들에 대한 지원을 대폭 축소했다.

그리고 탈북 중개인들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 탈북민들의 한국 입국을

억제하려 했다.

이명박은 인수위 시절부터 ‘탈북민 인권 개선’을 내세웠지만 정작 태국·몽골·중국 등 제3국에 탈북민들을 수용할 수용 시설 건립을 추진했고, ‘원정화 사건’ 이후로 탈북민들을 ‘잠재적 간첩’ 취급하며 탈북민들에 대한 차별 조장과 통제를 강화했다.

한국 입국 심사기간을 늘리는 등 심사도 강화됐고 탈북민 지원금에도 인센티

브제를 적용했다.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들이 북에 있는 가족의 생계를 위해 송금하는 것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처벌했다. 정작 정부가 대북 지원을 다 끊어 놓아 북한 주민들의 처지는 더 어려워졌는데도 말이다.

심지어 화성외국인보호소에는 무국적 탈북민 5인이 장기 구금돼 있다. 이들은 북한에는 화교로 등록돼 있지만, 중국

과 처벌을 강화한 것은 대북 화해 정책을 편 노무현 정부 때였다. 당시 노무현 정부의 이 정책은 탈북민들의 한국 입국을 억제하고, 탈북민 수가 늘면서 생겨난 경제적 부담을 줄이며, 북한·중국과의 외교 관계 마찰을 피하려는 냉혹한 계산의 산물이었다.

민주당 정부의 ‘조용한 외교’는 <경향신문> 김진호 논설위원의 지적처럼 북한 주민들이 “몽골과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버마 등 중국 주변의 제3국으로 우회하기 위한 죽음의 행진”이 계속되는 ‘불편한 진실’을 방치하는 것이다.

노동자 국제주의

따라서 진보진영은 탈북민에 대한 정부와 우파의 추악한 위선을 폭로하면서도 북한의 피억압 민중 편에서 탈북민들을 환영하고 옹호해야 한다. 북한 주민들과 탈북민들은 모두 미국의 대북 압박, 이명박 정권의 대북 지원 중단으로 인해 가장 큰 고통을 받은 당사자들이다.

탈북민들에 대해 ‘즉결 처분’, ‘3대 멸족’을 운운하는 북한이 사회주의와는 아무런 공통점도 없음은 물론이다.

주민들이 탈출을 선택할 만큼 굶주리고 절망에 빠진 상황에서도 부와 권력을 세습하고 있는 북한 관료들은 또 다른 억압·착취 체제의 지배자들일 뿐이다.

탈북민 문제를 미국과 남한의 냉전 우익들이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 부풀려진 거짓으로 치부하며 침묵해서는 안 된다. 당장 보수언론과 우익들은 진보진영이 이 사안에 침묵하는 것을 이용해 공격하고, 자신들이 ‘인권의 수호자’인 양 위선을 떨고 있다.

이 점에서 통합진보당이 이 사안에 대해 아무런 입장조차 내지 않은 것은 아쉽다.

우리는 전 세계 피착취 피억압 대중과의 국제적 연대라는 관점에서, 탈북민들을 가로막는 북한, 중국, 그리고 위선적인 한국과 미국 지배자들 모두에 반대하며 탈북민들의 자유를 옹호해야 한다.

등록금, ‘짚کم’이 아니라 ‘대폭’ 인하하라

올해 전국 4년제 대학 등록금이 평균 4.5퍼센트 내렸다.

그중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이화여대 등 실질적으로 등록금이 가장 비싼 대학들의 인하율은 2~3퍼센트에 그쳤다.

이는 반값등록금은커녕, ‘학교법인’이 정상적인 회계 운영만 해도 등록금 12.5퍼센트 인하할 수 있다’는 지난해 감사원의 감사 결과조차 무시한 것이다.

여전히 대학 평균 등록금은 한해 6백 70만 원(국공립대학 4백15만 원, 사립대 7백37만 원)으로 절대적으로 높다.

게다가 대학들은 이런 소폭 인하의 비용조차 학교 구성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 한양대, 광운대 등은 수업일수를 줄였고, 동아대는 교과 자체를 대폭 없앴다. 시간강사들의 수업을 줄이고, 원래 있던 장학금이나 동아리 활동 지원금을 줄인 곳도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이명박 정부는 “등록금 사실상 20퍼센트 인하 효과가 난다”면서 생색내기 바쁘다.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박범훈은 “등록금이 역사상 처음으로 인하됐으니 여러분이 고맙게 생각하셔야 한다”며 황당한

말을 늘어났다.

그러나 졸업하는 동시에 1천3백만 원이 넘는 빚을 지고 신용불량자로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생색내기 쇼가 아니다.

국공립대부터 무상교육을 해야 한다. 이미 불법으로 판결 난 기성회비는 폐지돼야 하고, 국공립대의 애초 취지대로 정부가 교육을 책임져야 한다.

투쟁의 결함

사립대는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고, 정부가 사립대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장기

무이자로 대출해 줘야 한다.

이것을 위해서는 약 7조 원가량이 필요한데, 이는 교육재정을 OECD 평균 수준으로만 확대해도 마련할 수 있다.

이런 대안을 실현하려면, 학교 당국과 정부에 맞선 투쟁 모두가 필요하다.

반값등록금 투쟁을 더욱 효과적으로 벌이기 위해서라도 학내에서의 투쟁에 기권하는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된다. 학생들이 가장 피부로 느끼는 문제들을 둘러싸고 학내에서 대중 운동이 잘 건설돼야 자신감이 높아지고, 학생들이 정부를 향한 투쟁에도 더 잘 나설 수 있기 때문

이다.

지난해에도 학내에서 투쟁이 활발하고 성과를 거뒀던 경희대나 동국대 학생들이 반값등록금 집회에도 가장 많이 나오고 활력 있었다.

현재 몇몇 대학에서 등록금 소폭 인하를 규탄하고 추가 인하를 요구하는 운동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또한 반값등록금 국민본부와 한대련은 3월 30일에 대규모 시위도 준비하고 있다. 이런 투쟁을 결합시키며 건설해 나가자.

성지현

소식·보고

소식·보고 면은 작업장과 대학 등의 투쟁 소식을 나누는 장입니다.
3월 12일(월)까지 소식을 보내 주십시오.

Report@left21.com

금속노조 대의원대회



사진 출처: 금속노조

투지가 꿈틀대고 있음이 드러나다

2월 27일 열린 금속노조 임시대의원대회는 기층 활동가들 사이에서 투지가 꿈틀대고 있음을 보여 줬다. 이것은 기아차의 전상민 대의원이 ‘한미 FTA가 발표되는 3월 15일에 파업하자’고 제기하면서 드러났다. 금속노조 지도부는 그를 말리며 제안을 철회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그는 물러서지 않았다. “비록 파업을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지만, 금속노조는 2006년에 한미 FTA 저지 파업을 해 보지 않았는가. 최대한 파업을 조직해 이명박 정권과의 투쟁 전선을 만들어야 한다.”

지금부터 투쟁 기운을 만들어야 한

다는 취지의 찬성 발언이 잇따랐다. 인상적인 것은 표결 결과 무려 47퍼센트가 찬성했다는 것이다. 단 9명이 부족해 부결되기는 했지만, 박상철 위원장은 ‘최대한 빨리 투쟁 계획을 잡겠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 해고·부상·구속·수배 등을 당한 조합원들에게 생계비 지원을 위해 지급하는 투쟁 기금도 논쟁점이었다. 지도부는 재정난을 호소하며 지급 기준을 까다롭게 만들고 기간을 줄이자고 제안했다. 특히, 노조의 공식적인 의결기구를 통하지 않은 투쟁에 대해서는 기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 제안은 즉각 반발에 부딪혔다. 김

혜진 대의원은 기금을 줄일 게 아니라 조합비를 인상하자고 옹계 주장했다. 결국 노조의 의결기구를 거쳐야 기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은 삭제됐고, 투쟁하다 다쳐 입원한 노동자에 대한 생계비 지급기간을 축소하자는 내용도 철회됐다. 이날 일부 좌파 활동가들이 ‘통합진보당은 진보가 아니다’ 하며 선거 방침 논의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정작 중요한 투쟁 쟁점에 열의를 보이지 않은 것은 아쉬웠다. 정치적으로 투쟁을 제기하고 선동할 활동가들의 구심이 중요한 시기다.

모승훈

교육 산별노조 추진을 환영하며

교사와 학교 비정규직이 단결해야 한다

최근 서울에서만 7백 명이 넘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줄줄이 해고됐다. 50여 직종에 15만 명이 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있는 학교는 그야말로 비정규직 백화점이다. 정부와 학교 당국은 신분·고용·임금에서 차별을 만들고 갈등과 분열을 조장해 왔다. 이제 그 차별과 분열의 사슬을 끊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학교 비정규직 노조들이 결성된 것은 중요한 출발이다. 여기에 더해 같은 작업장의 정규직, 즉 교사들이 힘을 합쳐야 한다. 실제로 전교조 교사들은 진보교육감 당선 이후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조직하는 데 중요한 구실을 했다. 서울지역의 일부 전교조 활동가들은 해고된 비정규직을 방어하면서 학교장에 맞섰다. 따라서 전교조와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가 함께하는 ‘교육운동노동조합 협의회’, 이를 바탕으로 한 교육 산별노조 추진은 환영할 일이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 자신이 누구보다 교사들의 연대와 지원을 바란다. 그런데 일각에선 이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근 전교조 대의원대회

에서도 일부 좌파 활동가들은 “학교 비정규직 노조들 사이의 갈등”을 이유로 “교육 산별노조 건설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래서 이 안건은 유예되고 말았다. 물론,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외에도 공공운수노조 소속의 전국학교회계직연합, 학교 비정규직 분회 등이 오래전부터 활동해 왔고 이 세 노조 간부들 사이에 갈등·반목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노조 간부 수준에서는 조직 편제가 민감한 쟁점이겠지만, 평조합원들의 입장에서선 모두가 함께 단결하는 게 효과적인 데 말이다. 그럼에도 이런 갈등을 이유로 교사와 학교 비정규직의 단결을 추구하는 교육 산별노조 건설에 반대할 수는 없다. 투쟁 속에서 연대하며 신뢰를 회복하고, 단결을 꾀해야 한다. 최근 학교 비정규직 노조들이 함께 모여 ‘서울지역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를 결성하고 공동 투쟁을 벌이는 것은 좋은 사례다. 이런 공동의 실천에 전교조도 적극 함께하면서, 교육 산별노조로 나아가자.

김연오 전교조 대의원

인천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파업

통합진보당 배진교 구청장은 요구를 수용해야

인천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노동자들이 2월 16일 파업에 들어갔다. 비정규직 정규직화, 간접고용 노동자의 직접고용과 고용승계, 셔틀버스 운행 재개가 노동자들의 요구다. 특히 인상적인 것은 정규직, 직접·간접 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하나의 노조로 뭉쳐 다 함께 싸우고 있다는 점이다. 조합원 1백 퍼센트가 파업에 동참할 만큼 노동자들의 자신감도 높다. 인천 지역의 여러 노조들과 시민들도 열렬한 지지를 보내고 있다. 간접 고용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낮은 임금을 받으며 주말도 없이 일해 왔다. 그래서 노조가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하라고 요구했지만, 사측은 “경영 여건

상 힘들다”며 노조 탄압에만 골몰해 왔다. 그러나 높은 수익을 구가하고 있는 남동구 도시관리공단은 노동자들을 정규직화하거나 노약자를 위한 셔틀버스를 운행할 여력이 있다. 더구나 공기업은 수익성을 잣대 삼아선 안 되고, 오히려 비정규직 철폐와 복지 확대를 위해 앞장서야 한다. 공단 이사장 임명권을 가진 통합진보당 배진교 구청장이 이런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에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는 것은 정말 유감이다. 배진교 구청장과 통합진보당 인천시당은 진보정당의 이름에 걸맞게 행동해야 한다.

김동은

전북 버스

공동 파업에 나서자

전북 버스 노동자들이 2월 22일 지방노동위원회 조정신청을 넣으로써 사실상 쟁의행위에 돌입했다. 대다수 조합원들은 지난 파업처럼 흔들림 없이 나가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일부에선 노동부가 불법 파업으로 몰 것을 우려해 투쟁을 유보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대부분의 노조가 조합원 과반수를 확보해 교섭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과반수를 넘지 않는 호남고속을 제외하고 나머지가 협상을 맺는 방식으로 가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대안이 아니다. 사측은

그동안처럼 호남고속을 집중 탄압한 이후 나머지를 각개격파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금이 투쟁할 절호의 기회인 것을 알고 있다. 다른 선택의 여지도 없다. 총선을 앞두고 힘을 집중해 사측과, 이들과 유착한 민주당을 비롯한 권력자들에 맞장 때야 한다. 전주 지역 시내버스 노조의 조직율이 70퍼센트 이상으로 높아져 지난해 파업 때보다 힘드 커졌다. 노조를 탄압하고 분열을 조장하는 자들에게 본패를 보여 주자.

소경환 민주버스노조 전일여객지회 대의원

부산일보

박근혜를 정조준하는 투쟁

편집권 독립을 요구하는 〈부산일보〉노동자들의 투쟁이 한창이다. 현재 〈부산일보〉의 소유주는 주식 1백 퍼센트 전부를 보유한 정수장학회다. 박근혜가 이 정수장학회의 실질적 소유주라는 것은 널리 알려진 바다. 그래서 〈부산일보〉사측은 선거 때마다 노골적으로 박근혜를 미화하며 불공정한 언론 만들기에 앞장서 왔다. 정수장학회와 박근혜의 〈부산일보〉지배는 정당성도 없다. 최근 법원이 밝힌 것처럼, 1962년에 박정희가 〈부산일보〉소유주한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이 재단의 출발이고, 이름만 바뀌었을 뿐이다. 아버지로부터 재단을 물려받은 박근혜는 2005년까지 10년 동안 이사장이었고,



2월 20일 〈부산일보〉 촛불 문화제

그 이후에도 그의 측근이 이사장직을 맡고 있다. 이 때문에 노조는 지난해부터 본격적인 투쟁에 돌입했다. 사건의 발단은 노동자들이 신문 1면에 ‘정수장학회 사회환원’ 촉구 기자회견을 보도하면서 시

작됐다. 사측은 곧바로 편집국장을 대기 발령하고 노조 위원장을 해고했다. 노동자들이 또다시 ‘부당 징계’를 기사화하려하자, 사측은 아예 신문 발행을 중단시켰다. 노동자들은 지역의 정당·시민사회의 연대 속에 지지를 넓혀 갔다. 최근 부산을 방문하자마자 〈부산일보〉노동자들의 시위에 직면한 박근혜는 “나하고 할 얘긴 아니다” 하며 책임을 회피했지만, 이런 말은 먹이지 않고 있다. 여론은 정수장학회와 박근혜를 정조준하기 시작했다. 이 속에서 노동자들은 기존 사장을 퇴진시켰지만,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투쟁을 지속하고 있다. 공정 언론을 위한 싸움에 연대하자.

이상엽

한일병원

식당 노동자들의 ‘작지만 큰 싸움’

서울 도봉구에 위치한 한일병원에서 식당 노동자 19명이 해고된 지 60일이 넘었다. 한일병원 사측은 의료 공공성은 뒷전으로 하고, 부당해고와 하청에 재하청을 남발하는 전형적 노동탄압을 저지르고 있다. 지난해엔 식당 노동자들이 장기간 저임금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결성하자, 계약을 해지했다. 이는 너무나 악랄한 보복

성 노조 탄압이다. 해고된 식당 노동자들은 10년에서 많게는 30년 동안 일해 온 숙련된 노동자들이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환자에게 제공되는 배식은 ‘의료행위’의 연장이다. 그런데 사측은 환자들의 건강을 챙기는 노동자들을 하루아침에 대량 해고했다. 이에 맞서 해고된 노동자들이 병원 앞에서 ‘희망텐트’ 농성을 벌이고 있

다. 지역주민들과 통합진보당·진보신당·사회단체들의 연대와 관심도 계속되고 있다. 이 투쟁이 승리한다면 최근 잇따라 해고되고 있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힘이 될 것이다. 한일병원 식당 노동자들이 자신의 투쟁을 “작지만 큰 싸움”이라고 부르는 이유다.

김석진



핵안보정상회의는 세계 평화와 안전을 위협한다

핵안보정상회의가 다가오면서 이명박 정부의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우선 이명박 정부는 핵안보정상회의 반대 운동 진영을 겨냥해서 '북핵도, 이란 핵도, 핵발전소도 이 회의의 의제가 아니다'라며 거짓말을 하고 있다. 단지 "세계 평화와 안전을 위한 회의"(이명박)라는 것이

다. 그러나 이런 눈 가리고 아웅 식 논리에 속을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이미 이명박 정부는 서해상에서 해상사격 훈련, 이지스함까지 동원한 대잠수함 훈련을 벌인 데 이어서 쌍용 훈련, 키리졸브 훈련 등 초대형 한미 합동 군사훈련을 줄줄이 열 계획이다. 북한과 이란에 대한 군사공격을 협박해 온 미국을 비롯한 주요 열강 정상들이 모두 모이는 핵안보정상회의는 그 정점이 될 것이다. 이런 일정들이 '세계 평화와 안전을 위한' 것이라는 말은 어처구니가 없다.

따라서 북한, 이란의 핵 개발이나 그 체제를 지지하지 않더라도, 평화를 바라는 사람들은 모두 핵안보정상회의에 반대해야 한다. 미국 등 핵 독점 열강들의 압박은 이란과 북한의 반발만 낳을 뿐이다. 미국의 선제공격 위협을 받아 온 이란과 북한은 핵무기가 없었던 이라크가 미국에게 처참하게 유린당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오히려 핵무장을 서둘렀다.

결국 문제는 제국주의 강대국들이 보유한 수만 개의 핵무기이며 이들이 핵무기 확산을 일으켜 온 장본인들이다. '테러 방지'는 이들의 명분일 뿐이다. 9·11 이후 미국의 대테러 정책은 테러단체뿐

아니라 테러를 지원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국가에 대한 핵 공격까지 정당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돼 왔다. 게다가 핵안보정상회의는 후쿠시마 재앙으로 만신창이가 된 핵발전소에 대한 신뢰를 회복시켜 다시 '원자력 르네상스'를 일으키려는 회의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 회의가 제대로 열리지 못하고 도둑 막는 것은 평화를 바라고 핵에 반대하는 진보진영의 중요한 의무다. 주요 시민·사회단체가 결집한 '핵안보정상회의의 대항행동'은 형식적인 대응을 넘어서 핵안보정상회의를 실질적으로 저지하거나 회의에 차질을 주겠다는 분명한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운동을 건설해야 한다. 회의가 열리기 전뿐 아니라 당일에도 반대 시위를 조직해야 한다.

장호중·전지운

NEW 추천 소책자



장호중 외 지음 / 3,000원



사진 출처: 청와대

최근 이명박 정부는 우파 결집 시도를 하면서 핵안보정상회의도 강조하고 나섰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 강행을 중단하라

2월 29일 북미 합의가 발표됐다.

북한이 핵개발 프로그램을 일시 중단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을 받는 대신, 미국은 북한에 영양 지원(영양강화제와 옥수수) 24만 톤을 지원하는 것이 합의의 핵심이다.

이번 합의의 불과 며칠 전까지 한미연합군이 키 리졸브 훈련 강행 의사를 밝히고, 북한이 이를 '전쟁 위협'이라고 반발하며 긴장이 형성됐던 것에 대면 북미합의와 공동 발표는 진전이라 할 수 있다.

아마 이란 압박에 치중하고 있는 미국으로서는, 혹시라도 북한을 계속 무시·압박하다가 김정은 체제가 예기치 않은 방향으로 나가는 것을 우려한 듯하다.

그러나 이번 합의가 안정적일지는 알 수 없다. 합의에 대한 북미의 해석과 강조점이 다소 다르다. 북한은 식량 지원 약속을, 미국은 핵실험 중단을 성과로 강조했다.

결국 이번 합의가 6자 회담 재개로 순탄하게 이어질지는 속단하기 힘들다.

이것은 한반도 주변의 상황이 단순하지 않기 때문이다.

중국 포위 전략에 바탕한 한미 연합군의 키 리졸브 훈련도 계획대로 진행될 예정이고, 중장기적으로는 한·미·일 군

사동맹 구축이 여전히 추진되고 있다.

당장 이명박 정부는 2월 29일 "안보에는 타협이 없다"며 제주도 강정 해군기지 건설 강행 의사를 밝혔다. 설계도 부실 의혹이 드러났고, 올해 기지 건설 예산이 전액 삭감됐는데도 정부는 1조 원 넘는 돈을 써서라도 공사를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무자비한 탄압도 예고하고 있다.

이명박은 '관광 미항 개발' 운운하며 물타기를 하지만, 실제로 제주 해군기지는 미국의 대중 압박과 포위 전략의 일부가 될 것이 뻔하다. 영화배우 로버트 레드포드 같은 미국의 저명 인사들마저도 제주 강정 기지 건설에 적극 반대하는 이유다.



사진 출처: 제주평화연대

끌려가는 평화 운동가

환경운동가이기도 한 로버트 레드포드는 2월 3일 "이지스 탄도미사일 시스템으로 중국을 포위하려는 미국과 항공모함이나 잠수함 이지스, 구축함 따위가 드나들 대형 해군기지를 건설하려는 한국 정부의 야욕"이 이 문제의 본질이라고 통렬히 비판했다.

한반도 전문가 브루스 커밍스 교수도 "타이완을 두고 중미전쟁이 일어난다면, 미국은 [건설 중인] 제주 해군기지를 그 전쟁에 동원할 것이라며, 그러면 중국은 한국을 다시 공격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지경"이라고 경고했다.

따라서 이명박의 제주 해군기지 건설 강행 발표는 한미동맹 강화로 평화를 파괴하면서 우파적 지배를 강화하겠다는 뜻이다. '너네가 먼저 시작했던 옳은 사업 아니냐'며 총선을 앞두고 민주통합당의 약점을 노리고도 있다.

제주 해군기지 반대 운동을 주도적으로 조직한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을 국가보안법으로 탄압한 것도 이런 우파적 반동의 일부다.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는 이명박 정부의 반동에 맞선 행동을 거리에서 불붙여야 한다.

김문성

계간

이론과 실천의 통일

마르크스21



12호 2011년 겨울

가격: 16,000원

www.marx21.or.kr



쟁점 오늘의 위기와 저항

우리 시대의 경제 위기
미국 '점거하라' 운동의 의의
오늘날 중국의 저항 운동
계속되는 이집트 혁명
카다피 몰락과 리비아의 앞날

특집 알렉스 캘리니코프 2011년 방한 강연 (2)

금융화와 오늘의 세계경제
사회민주주의 — 제대로 이해하고 대처하기
인민전선이 진보운동의 패배를 부르는 이유
대담: 오늘의 세계와 혁명적 좌파

기획 연재 왜 자본주의는 경제 위기에 빠지는가

1. 마르크스의 경제위기론과 그에 대한 비판

서평 《노동계급 형성과 민주노조운동의 사회학》
한국 노동계급은 쇠퇴했는가?

구독 문의 | 전화 02-2268-7608, 이메일 marx21@marx21.or.kr, 웹사이트 http://www.marx21.or.kr
알라딘, 예스24, 인터파크, 교보문고, 영풍문고, 반디앤루니스 등에서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구입처는 웹사이트를 참조해 주세요.
정기구독료 1년 64,000원 | 2년 120,000원 | 3년 180,000원 | 5년 300,000원 | 7년 420,000원 | 10년 600,000원
(마르크스21)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여러분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따뜻한 지지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웹사이트(www.marx21.or.kr)에서 휴대폰 결제, 계좌 이체, 신용카드 결제를 하실 수 있습니다.